

제41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일(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4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4
 - o 소위원장(구자근) 인사 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5
 - 종합정책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법률안 제정과 예산입니다. 이 중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예산도 잘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자정 가까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결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 및 일시 불출석을 제출한 기관이

25개 부처에 달합니다. 불출석 사유도 구구절절합니다.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종합정책질의에 모두 불출석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한다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일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국무위원의 마음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불출석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를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고 사실은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삶에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이 막무가내식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예결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23년도 국가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과 또 앞으로 국가 미래 발전에 힘이 되는 그런 예결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호남 지역, 특히 새만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조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뜰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예산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지난번 1차 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인사 못 하신 한민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 가 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오늘과 9월 3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월 4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4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될 부별심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10시12분)

○위원장 박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박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구자근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구자근) 인사

(10시13분)

○위원장 박정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방금 결산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23회계연도 나라 살림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펴서 25년도 예산에 또 국민들의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10시16분)

○위원장 박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회가 국가 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출석하신 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동적 경제 및 행복사회 구현을 목표로 총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향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에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 예산편성 및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국무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497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534조 원보다 37조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490조 4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40조 원 중 90.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89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 원 증가한 2439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3조 원 증가한 569.9조 원입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해 대책 등을 위해 예산 4조 6003억 원 중 1조 309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7조 원, 세출결산액은 490조 400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889조 8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7조 8000억 원 감소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총 8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8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2439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물품은 2050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92조 5000억 원으로서 전년도 1033조 4000억 원에서 59조 1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514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24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93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들에 처분을 요구한 203건 중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1%에 해당하는 18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9%인 18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18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3건 20명이고 시정요구가 4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제1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입니다.

먼저 2023년 재정 운용의 경제적 성과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재정 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 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의 상저하고를 전제로 신속 집행을 추진해 온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쪽,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세수 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하여 대응하였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가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15쪽, 재정수입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에는 75%,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징수 관행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18쪽,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2023년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기획비용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수입 재원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보유 재원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거나 수입구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유형별·주제별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 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 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 결정되었음에도 반납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중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있고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조치는 개별사업별 반납 독려 외 별다른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대위변제 금액이나 차입금 증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계획변경 또는 사업관리 부실 등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성파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기관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강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등 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9쪽,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입니다.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피출연기관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 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4쪽, 비효율적인 집행 등입니다.

첫째,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경우, 사업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6쪽, 국가재정법 위반 등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 원의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인턴사업을 연중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통해 46개 부처에서 약 225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38쪽, 재정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 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 정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국무위원 및 정부 기관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집행의 주체인 정부 부처의 많은 기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석이나 불출석을 동의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산심사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결산 일정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등 일정을 잡아서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러 결산심사에 맞추어 그러한 해외 출장 및 불요불급한 일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져온 불출석 사유를 불허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옵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것처럼 3일 불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이틀 또는 하루 불출석으로 허가해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는 애초에 없는 일정을 만들었다가, 불필요한 일정을 일부러 넣어서 최대한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도 안 오셨는데요, 신원식 국방부장관겸안보실장의 경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아예 야당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역대급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부처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도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22대 국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개최된 상임위나 이런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 차원에 있어서의 심각한 제재와 또 국회법 준수에 대한 정부 부처 위원에 대한 간곡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결산심사에 불출석한 기관의 경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심사 때에도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홍보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구자근 간사님 3분……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구자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정 예,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 방송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녹화를 해서 국민들이 보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국무위원들 출결 사항은. 그리고 공수가 교대가 되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간사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승낙을 얻어서, 득해서 진행이 되면 더 좋았을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출장보고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나 국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신해서 대리출석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예결위장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라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은 피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좋은 결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결산심사나 예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국민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원활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두 분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모두말씀을 드렸지만 늘 한 해의 결산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 그 책임자가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일정을 고려하여 불출석 사유나 일시 불출석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출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야당에, 여당에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야당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불출석에 대한,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구를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예결위원님들!

첫 질의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팩트 체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서 소득세율의 인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소득세가 왜 16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외경제 여건 악화 때문에 경기가 둔화돼서 그것에 대한 미친 영향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부가세율의 인하는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2023년에 부가세도 무려 9.4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법인세율은 1%p 인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법인세는 24.6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 1%p 인하로 24.6조 원이 덜 걷힐 수가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25%의 세율이 24%로 1%p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법인세수의 아주 최대치로 계산해도 2~3%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그것은 아무리 커도 1조~2조 원이고 24.6조 원의 세수 부족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해서 종합해 보면 세율을 낮춘 적이 없는 소득세, 부가세를 포함한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기침체가 이루어졌고 반도체뿐 아니라 수출 등등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내수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밖에 없고,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동반 부진의 순환고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나 세간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진실 위에서만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해법으로 갈 수 있다 이 논리를 꼭 국무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공유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원 곱하기 세율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해서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예산정책 재정정책 경제정책 국가 경영의 기본은 세원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해서 세율을,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나 이렇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원을 높여서 세수를 높이하고자 하는 장기 증세 전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감세나 증세나 하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저희는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관점은 본 위원은 적세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항상 적절해서 세원을 키워야 하고 동시에 적절한 세율 속에서 충분한 공동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관점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치 상승 의욕을 억제하는 상속세 증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배당을 억눌러서 국민연금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배당세 증과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이것이 적절한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말씀하신 우리 조세정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적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크든 작든 이미 고액자산가 유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굶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기는 암이 되기 전에 짜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단 회사와 법인의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크게 줍니다. 동시에 법인세가 낮아졌다 해서…… 아니, 법인의 수익이 낮아졌다 해서 급여를 쉽게 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아졌다 해도 소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 부가세 순으로 세수 감소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많은 나라, 많은 국가에서도 경기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게 법인세하고 자산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정치 공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동료·선배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적세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듬고 민생을 보듬고 미래를 여는 예산편성,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전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세수 부족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산업구조 편중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반도체만 있는 나라와 반도체도 있는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서 세수를 확보하고 수출을 해서 공동체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만 편중돼서 의존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해서 저희는 산업구조의 편중을 벗어나야 하고요. 동시에 세수 부족은 세수 예측에 기반하는데 저희가 낙관적인 세수 추정과 어떤 관대한 재정지출 운용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본 위원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침체가 급격히 찾아올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찾아왔다면 저희는 또한 재빨리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관대한 재정지출과 세수 추계의 관점을 신속히 교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사고의 시계를 좀 넓혀서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나라가 어디인지 경제부총리는 혹시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우리나라하고 리투아니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놀랍게도 G7 턱밑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그리고 최근 5년간 급격히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중산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 노력해서 납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납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채무부담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오른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오른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국가채무도 늘려 온 나라 중의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세금도 더 거뒀고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지출 규모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채무와 조세를 더한 것이겠지요. 그것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지요. 해서 아직 재정지출 규모 면에서는 G7과 조금 차이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가 늘어났다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 거둔 조세와 국가채무로 어디에 지출했느냐, 그것을 순환시킬 자신이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12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조세를 막대히 거뒀고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에 연동돼서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정부를 비난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늘어났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다면 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필수의료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는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돈은 더 썼지만 응급실의 문제, 소아과의 문제, 내외산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지금 의료개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조 원에 걸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이라고 하지요.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향성은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희가 4조 원을 투입했는데 집값이 안정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희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세금을 걷고 있고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지출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 10년간 막대히 늘어 왔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생계급여를 월 40만 원 이상 늘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잘하셨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5년 동안 19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40만 원 넘게 높였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린 것을 칭찬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극화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양극화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마는 복지지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의 기대만큼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복지지출은 두툼하게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체감적으로 해결된 것인지 저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부금이 늘지만 지방소멸도 진행 중이고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지만 저출산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지출을 늘렸지만 필수의료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을 투자했지만 집값 안정은 아직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꼭 공유드리고 싶고, 저희 22대 국회 예결위에서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재정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야기를, 구호를 내세웠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은 건전재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출해서 반드시 사회의 문제, 세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개별 예산들을 좀 살펴봤는데 늘어난 조세 규모와 국가채무에 비해서 안타깝지만 영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낙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차관 나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금까지 3조 2000억 원 정도 지출해 온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민 위원**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3.2조 원을 투입했는데 구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효과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수민 위원** 본 위원은 금번 결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부정확한 문제가 있다면 검히 받고 저 또한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600조 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하는 거대 재정지출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영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을 안 쓰는 것이 좋은 부분은 안 써야 합니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마 중기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대표 답변 주시지요.

7월 3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상당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전체적으로 25조 원 규모라고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것이 충분하고 효과적일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충분한지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점검을 할 것이고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정부가 차별화된 대책을 새롭게, 분산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과와 한계, 진도를

체크해서 집요하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고쳐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과거 5년, 10년 동안 돈을 쓰고도 계속 제자리인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지금 소상공인 대책에서 한 10조 원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희가 코로나 위기 중에 융자로 많이 도와줬는데 그게 고금리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빚의 굴레에 눌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수민 위원** 그것의 한 처방으로 새출발기금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주 신속하고 효과가 있을 때까지—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집요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다음,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 송배전망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이 송배전망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송배전망을 설치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을 설치해야지 풍력과 태양광에 보조금만 주고 그것의 전기를 현장으로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송배전망은 만들지 못했고,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충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국회 내에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수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올해 지급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수소차, 특히 전기차 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는데 그 핵심 문제로 충전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에 부족한데 수소차 구매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미스매치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수소차 충전기 보급사업도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 재정, 과학 재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질의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율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율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두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돌려서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2년도 인사청문회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기억합니다.

○황정아 위원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본인께서 하셨던 인사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제청권과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

국민께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빛이 바래다 못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증오와 무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책임총리가 되신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이게 통합과 협치입니까? 기시다의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전체적인 운영, 처리 이런 방안이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저는 위원님이 저의 청문회 때 말씀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고 우리 국회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권을 해 본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국무총리 한덕수 그걸 위해서 많은 성과가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예산편성 전부 다 여야 합의로 했고요. 최근에는 간호법을 여야 협치로 했고 또 부동산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대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총리님,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말기시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사의까지 표명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분명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때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 고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이후에 바로 몇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23%입니다. 총선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아 놓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총리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1분기에 전기에 비해서 1.3% 예상외로 성장을 한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였지요. 그러나 상반기 성장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8%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고 현재 올해의 성장 전망은……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한덕수 국민 GDP 1조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황정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0.2% 2분기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역성장, 뚜렷한 위기도 없는데 역성장은 처음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8%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IMF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2.6% 성장의 트렌드는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상저하고 운운하다가 1.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4%, KDI가 2.5%, 지난해 폭망 성적표를 받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대의 저성장률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충분치는 않지만 특히 우리의 민생, 일부 사회적 약자층에는 분명히 고금리 이런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팬썬은 추세를 보일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제적인 기관들이 대한민국은 선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현장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자영업자 몇 명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매년 한 100만 개가 사라지고 100만 개 정도가 새로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무려 100만 명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바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든 대책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소상공인들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빛 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올해 7월에만 35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실질임금은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작년도에 1.4% 성장을 했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특히 우리가 2018년 이때 최저임금을 두 자리로 16.8%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10.6%인가요, 연달아 올리던 그때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상황 인식을 정말 현장과 동떨어지게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지난해보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주도, 시장중심 정책이 성공했다며 낮부끄러울 정도로 홍보 총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분기 경제 폭망 지표들이 또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모든 지표가 민생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급감합니다. 2022년 6월에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 내리기 위해서 ‘직접일자리, 공공·준공공 부문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직후에 통계청은 7월 소매판매 지수가 1.9%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23주째 오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별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작정 거부하는 이 정권을 보며 어느 국민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를 보면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검증 기준이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장관 제청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장관 제청 기준은 당연히 그 지명되는 분이 또 임명되실 분이,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한덕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지요. 어느 한 개의 요인을 가지고

100%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거는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지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듣고 설마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를,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당신은 내 배우자요’라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물론 제 착오입니다.

○**황정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거는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황정아 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군함과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거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자강력,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분명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과 또 일본과의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평화협정 이런 단순한, 그런 너무나 단순한 쪽으로 가서는 이거는 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맞는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짝사랑하신 것 그리고 일본의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지배…… 식민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일제는 착취를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가 이번에 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런 문제예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과 주장을 가질 수 있지요.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책자의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의 2세들에게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저기에 교육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총리님의 역사 인식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대한민국 총리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위안부는 일제가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면서 벌인 범죄였습니다.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인정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지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황정아 위원** 국무위원이……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또 자리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넉넉히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신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단점만 발휘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시고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고 법률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너무나 단편적인 한두 개의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의 전체를 평가하고 전체를 어떤 하나의 이슈와 연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황정아 위원** 국무위원의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제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역사 인식이 좀 더 실용적이고 맞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위안부 강제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장관급 공직자가 입에 담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8월 15일은 1919년에 수립된, 우리의 국가가 정부를 수립한 것이지요. 그 정부가 수립됐고……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는 그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같이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만약 아니라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분의 발언이 그분이 지금 말고 있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소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특히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중요한 고려 요소지요, 역사 인식과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일제강점기에요?

○황정아 위원 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지요. 다만 그 국적이 말하자면 소위 챌린지를 받는 계기가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김문수 장관은……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총리가 제청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국무총리 한덕수 국적……

○황정아 위원 총리에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제 말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국적이 부과, 국적이 부과됐고 강제 협약을 통해서, 소위 강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부과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적에 따라서……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일본에……

○**황정아 위원**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일본에 무슨 우리 권리를 상의한 게 있습니까.

○**황정아 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지요. 너무 대답을 길게 하시면……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가 선거를 했습니까? 저희가 일본 국적과,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까?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이것은 철저하게 차별된 그러한 거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게 일반적인 일본의 그런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총리님의 역사 인식은 그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헌법마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초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연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겠다고 한 그런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가짜뉴스이고 선동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행정, 정말 중요한 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들은……

○**국무총리 한덕수** 사실을 사실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황정아 위원**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어디 우리가 라인을 일본에다가 넘겼습니까?

○**황정아 위원** 국민들 상황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3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의 답변 관련해서 질의 답변에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예산 종합정책질의와 어디에서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무위원이 관련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예산 정책질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러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위원장께서 진행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20분간 질문하고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질문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개별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리드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정하시거나 여기에서 국무위원들께 재차 그런 요청을 드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께서 리드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점은 저희가 수많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시다라는 정부 측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예결위원회에서만은 우리가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좀 절제한 표현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제 입으로 다시 옮기기조차 민망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밀정이 있네 없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연도의 예결위의 수준과 품위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잘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그 취지는 답변자의 발언이 질의자의 질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의인데요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신 황정아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질까 사실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바는 익히 이해는 가나 김영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가 질의자의 질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종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수현 위원님.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대정부질문과 우리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답변을 제외하고 15분 또는 12분의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20분 내에 답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충분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만큼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러면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시간적으로 방해되거나 그런 측면도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그 말씀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남북 평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신다거나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기준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나 이것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히려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설사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듯한 이런 어떤 답변 태도는 위원장께서 마땅히 제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 홍기원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홍기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홍기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황정아 위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또 국민의 뜻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직후에 그런 식으로 깔아 내리는 듯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

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료 위원이 총리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사 그 표현 하나가 듣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이 위원의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려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좀 자제토록 해 주셔야 맞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예,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야가 정부를 상대하면서 예산결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해서서 질의시간이나 또는 이후에도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우선 총리님께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요? 스파이, 간첩 아닌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간첩이 있고 스파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상설적인 활동을 통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법무장관님 나오셨나요?

혹시 대통령실에 일본에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다는 신고나 이런 것 접수된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총리님, 라인이 우리 국영기업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민간 기업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보안사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특히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드렸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해 가지고 그런 의도가 전연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보완 대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민간 기업인 우리 라인 쪽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일본한테 넘겼다, 그것은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일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필요한 협의를 했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다시 한번만, 그러면 라인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정부가 일본에 라인 지분을 넘기라든지 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일본 정부도 그런 일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정부에 알려 왔고요. 더구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식을 넘기라든지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밀정도 없고요 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히 조치를 해서 라인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일본 총리 측에도, 정부 측에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요청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손이 56조 4000억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강승규 위원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세수 부족의 대응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거래로 조정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소위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언제 도입된 제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언제……

○강승규 위원 언제 도입된 제도냐고요. 93년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93년 도입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입을 왜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것은 각 정부 내의 기금과 회계 간의 자금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강승규 위원 여유 자금, 여러 기금 중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올해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 것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부로서는 세수 부족이 나온 것 자체, 발생한 것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정부는 선택을 하려면 새로운 국채 발행을 해서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정부 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해서 최선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올해 쓴 자금을 나중에 그 기금에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채워 넣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이나 발생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여기서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만 6600억 원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라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을 했을 것인데 56.4조 수준의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간 20조 원 수준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내부거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한쪽 거래에 따라서 6600억 원의 공자기금의 이자가 발생을 했지만 또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가지고 이자 지급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에 추경을 하면 그것은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게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정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4조를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채가,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주머니가 여러 주머니가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왼쪽 주머니, 소위 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 등을 오른쪽 주머니로 돌려다 쓰고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재정이 충분해지면, 세수가 많이 걷히면 왼쪽 주머니에 다시 채워 넣는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도 우리 내부의, 그러니까 외부에, 국채 발행을 해서 외국 기관에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이자가 좀 늘어나고 그랬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내부의 이자가 늘어나는데 그것조차도, 그것 자체도 늘어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 그것도 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보도라든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경을 안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부족 사태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난 상황에서의 대응으로서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채가 5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체적으로 국가채무가 한 500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400조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죄송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결국은 이런 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내부 살림을 잘하지 않고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재정을 운용할 생각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재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하지만 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다음은 부자 감세, 우리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아까 정리를 잘해주셔서 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의, 우리 총리님의 현명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율을 법인세를 1% 인하했습니다. 세율 조정을 해서 지금 세수결손 나온 것 56조 원 중에서 만약에 법인세 등을 조정한 것이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결손분이 나온 것이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세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6.4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저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법을 바꾸면서 나온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56.4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세율 조정도 없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분명 아까 경기침체라든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금 세수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 감세라는 말은 정말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아까 생계급여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인 것이고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것은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부총리님 얘기를 제가 또 쉽게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 말대로 세수라는 것이 세원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세율을 조금 낮췄다 하더라도 세원, 모수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해 주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한쪽의 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것을 부자 감세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세원이 풍부하면 이것이 과연 감세일까요, 증세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박수민 위원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자 감세라는 것에 저는, 부자라는 말 자체도 법인의…… 대기업이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안에는 노동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기업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다 하는 것도 어떤 조세정책 자체가 감세냐 증세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아까 적세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 감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세, 금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여러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투자세를 우리 정부에서는 폐지하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강승규 위원 폐지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1400만 투자자를 위한, 만약에 굳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세원을, 세수를 깎아 주기 위한 감세라고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금투세를 만약에 계속 도입을 해서 1400만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중에서 시장의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는 전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 간에는 서로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예.

산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전력기금이 고갈 상태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고갈 상태는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전력기금이 한 5.5조 있고요. 그중에 부담금 수입이 지금 조금 줄고 있는데 현재는 한 3조 원 정도가 부담금 수입입니다.

○**강승규 위원**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전력기금이 많이 소진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좀 줄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기간 동안에 준 금액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전력기금 등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 1.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전기 문제는 전력 생산 문제보다도 유통의 문제, 송배전의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강원도 쪽에서 발전되고 있는 원자력 그런 전력 등이 우리 수도권 의 반도체 등에 활용돼야 되는데 전력망 때문에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전력망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실 거예요? 물론 계획이 지금 있지만, 실제 전력망을 어떻게 송배전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소위 말하는 전력망 알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이고 있고 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력망 자체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전력망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데 육상으로, 고공으로 하는데 많은 민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중화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정부 측에서도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의 여유 있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지중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첨단산업 등에 따라서 많은 전력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그것 앞으로 20조 원을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한전에서 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난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전이 1년에 약 한 2.8조 정도를 전력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차 망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26년부터는 한 3.8조 정도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정상화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을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 적자가 200조 원이 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런 전력기금 등을,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배전망 확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전력망 확충 또 지중화 사업, 우선 필요한 곳 등에 집중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지중화 사업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용성이 좀 좋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주민 수용성을 키우고 전력망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국회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리가 그동안 근현대화 과정에서 철도라든지 도로 등에 많은 SOC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력망 확충도 중요한 SOC라고 생각을 하고 지중화 사업 등에 정부가, 획기적인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산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임미애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목소리, 임미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잠깐 박수민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소득세를 내리지 않은 것 맞습니다. 맞지요? 아까 소득세를 인하였냐 그러니까 안 하
셨다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미애 위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간 조정은 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구간 조정은 좀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 조치는 있
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미세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임미애 위원 법인세율은 1% 내렸는데 이 1% 내린 것 가지고 24.6조가 줄어드는 계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득과 영업외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
입제도를 도입해서 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도 영업외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
에 그것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영업외소득 부분을 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부 그런 부분 적절한, 맞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걷힌 것 가지고 왜 정부에다 탓을 하나라고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짚
고 넘어가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제가 박수민 위원 말씀에 동의한 이유는, 전체
적으로 세수가 감소된 것은, 결손이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세입예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모두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4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 보니 56.4조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핑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재정
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굉장히 고생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니까요 저렇게 많은 세수 핑크가 난 적이 없어요. 17년
도에 14.3조 그다음 18년도에 25.4조 정도가 났고 그리고 23년도에 56.4조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많이 세수 핑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22년도 말에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했고 그런
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56.4조의 핑크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핑크를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23년도부터, 22년 세법 개정에 의해서 23·24·25·26·27년도 5년간의 누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결손의 65%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의를 합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22년도, 23년도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에 따른 세수의 영향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동일한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미애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요.

○**임미애 위원**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4조의 핑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56.4조의 세수 핑크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수 핑크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대응하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요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보면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법정 한도는 14.3%인데요 감면율은 15.8%입니다. 24년도 법정 한도는 14.6%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은 15.3%입니다. 23년도 감면액은 69.8조고요 24년도 감면액은 71.4조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세감면액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총리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그 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합니다.

다만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의 경제성장률은 1.6%였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 노력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데 그게 1.4%까지 내려갔고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국제적으로 결국 금리가……

○임미애 위원 제가 국제 경기와 한국의 경기 상황이 달랐더라든가 국제 경기는 좋았는데 한국 경기가 나빴더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펑크 난 세수를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요.

○임미애 위원 법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세감면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이것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용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그 재정법에 그 퍼센티지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 퍼센티지를 넘지 않도록……

○임미애 위원 총리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가재정법상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을 물어보시니까요, 88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물론 권고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이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노력하여야 한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 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수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세수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요, 지방에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한 18.6조 안 내려보내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8.6조 원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 원 당겨셨고요. 타 회계나 기금에 보내야 할 돈 6.2조 원 지급하지 않았습 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지방에서 살림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3년 9월 18일 날 총리님께서 추경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 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기재부에서 9월 18일 날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2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 없으니까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하는 권한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급하다고 왼쪽 주머니에 옮겨 놓고 빼 쓰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서 17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의결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월 달에 갑자기 지방을 향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추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연락을 통해서 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0%, 부동산교부세는 18.3%를 조정할 거고 그 사실을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차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9월 27일 날 이런 공문 내려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전자문서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자문서로 내려보냈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자문서로 갔습니다.

○임미애 위원 문서로 내려갔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임미애 위원 문서는 어떤 권위를 갖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권위라고 하시면……

○임미애 위원 문서가 갖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재추계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을 사전 안내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 발표는 있었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것은 교부금은 정상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권한으로 27일 날 시군구까지 교부금을 깎아서 내려보내겠다는 통보를 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가재정법에 있는 불용하는 그 권한에 따라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용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불용을 결정하고서 예산 집행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가재정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갈 거면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이 줄 것에 대비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사업을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통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3년도에 단 한 차례도 추경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을 깎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건가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총리의 그 발언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른 불용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불용은 누가 결정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는 재정 당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불용 결정은요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왜 행정부에서 불용 결정을 하는 거지요?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불용 결정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는데, 결정한 금액과 또 다른 금액을 내려보내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받았어야지요. 불용 결정 여부를 왜 행안부가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가재정법에 있는 근거 규정이 좀 다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한번 볼까요? 행안부차관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요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년도에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면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교부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8일 날 기재부의 발표를 통한 다음에 이후에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예산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차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이 없어졌다고 난리였습니다. 이 기사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언론을 달구었던 내용인데 행안부차관님 기억 없으십니까? 저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행안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을 임의로 불용 처리함으로써 지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릴까요, 지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각각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왜?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거든요. 9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소리는 10월 달에도 그러한게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총리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분명히 위원님 걱정과 우리 집행한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부채, 국채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임미애 위원 총리께서는…… 잠깐만요.

총리께서는 지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추경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 국채 발행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면……

○임미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명확하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여야 되고 지방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보면서 이것은 지방의원을 해 본 나도 이해하는 건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추경은 없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그 발언이 행정부 전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법도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조치,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행정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쫓 예상한 대로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금 같은데 20% 내에서는 세출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유연성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런 유연성 내에서 정부로서는 빚을 낼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를 것인지……

○임미애 위원 그러면 총리께서 이후에 왜 추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교부금을 삭감,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교부세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헌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 모든 것을 위배하셨다는, 위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 허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허영 위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지방교부세 불용 관련해서 질의 과정 속에서 행안부차관이 문서로 시행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기재부장관이 기재부 차원에 있어서 는 문서 시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기재위 위원께서 문서로 하지 않았고 카 톱이나 전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재부와 행안부 차원에 있어서의 이 관련된 문서 수발신 영역과 카톡 과 그다음에 전화 지시한 부분들에 대한 시점과 담당자를 명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 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와 관련하여 어 떠한 형태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입 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점 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조치가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 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변화 헌법소원으로서 아시아에서 최초의 결정이고요 세 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정 부의 입장과,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리협약에 의해서 2035년 NDC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6 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이번 결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총 9명의 재판 관 가운데 5명이나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 목표는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같은 기준 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총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2030년 감축목표는 29.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 관님들이 판결문에, 결정문에 분명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설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감 축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 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순개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총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2030년 이후의 목표까지 쫓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 총리님, 전 세계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동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고요. 우리 법에 대해서 최고의 해석 권한을 지닌 법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니까 2030년 목표, 2035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결정문의 문구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변경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40%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률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헌법소원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볼록한 형태 보이시지요? 28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대거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경로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는 2%인데 2028년부터 갑자기 9%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답변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하고, 소비를 한 40% 정도 줄여라 이렇게 IEA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부분에서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오륙 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한 그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₂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박지혜 위원 총리님, 원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박지혜 위원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박지혜 위원 저 감축 경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저 감축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앞으로의 감축의 경로는……

○박지혜 위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감축 경로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왜 2027년, 28년, 29년에 많이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짧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예를 들면 우리의 풍력,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규제가 많습니다. 서른몇 개예요. 민주당에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내셨습시다만 2021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빨리 이것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풍력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는 아마 2020년대 말쯤 되어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 예를 들면 바이오퓨엘(biofue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박지혜 위원 총리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무총리 한덕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련한 새로운 감축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 매년 9%까지 감축하려면 지금부터 매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감축 경로를 발표할 때 탄녹위에서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총리님, 이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일부 R&D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데 조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 데 좀 시간은 걸립시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희는 서면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시다. 이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수소환원제철 R&D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최대 배출 산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실시된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요구된 금액이 8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25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269억 원입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2050년까지 최소 20조 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저렇게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양광 R&D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에 매년 절반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탠덤 셀 기술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절반씩 반토막 나고 있어서 현장 연구

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투자로 장래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국무총리 한덕수 이미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지혜 위원 저 역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한덕수 국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입법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예, 관련된 입법을 가열차게 추진해 주시고 올해 예산 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 인지 예산은……

○박지혜 위원 관련해서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지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이 2조 5000억 원가량이었는데요, 1875억가량 줄이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지혜 위원 지출 계획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믹스 개선 이런 노력으로 배출권 시장의 과잉 공급이 지속돼 가지고 매각 수입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위원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유상할당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60%, 2022년에는 43.4%였는데 작년에는 21.6%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계속 수입이 안 건힐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구조적인,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건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배출권의 유상할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과다할당의 방지라든지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재원이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1억 원 규모가 그렇게 이월이 됐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원이 없는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돈이 없다고 해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그냥 이렇게 미룬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재부장관께서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공급이 많다는 말씀 해 주셨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배출권의 과잉 공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거래하지 않고 이월하는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나눠 준 배출권 총량이 너무 많다는 점을 방증하고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사실 작년에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외는 막 10만 원이 넘는데 배출권 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지면 누가 탄소 감축기술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그간 느슨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되레 배출권을 그냥 팔아서,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오히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박지혜 위원 이렇게 기업들이 횡재 이윤을 벌어들이는 동안에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12.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안정적인 기후대응기금 재원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기업들에게 감축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시하고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 대책이 무엇인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지금 위원님 말씀과 경제부총리 말씀처럼 구조적인 개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이번 주에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됩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횡재 이익 부분을 줄이는 내용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 또 수요자, 수요를 늘림으로써……

○박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배출권거래제 개선 계획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적인 처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전환 부문에 대해서 100% 유상할당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가 전환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공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100%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환 부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전환 부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4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이 현실화되기,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요.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현 정부에서는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 드린 것과 같이 미온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재정투자, 배출권거래제의 느슨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가속화에 앞장섰다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탈탄소 기술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특히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삐를 당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감사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025년에 16개 부처 311개 사업, 예산 규모는 12.1조 원으로서……

○박지혜 위원 그래도 국가 전체의……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판결을 내려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 현재가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박지혜 위원 총리님, 기각됐다고 해서……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물론 저희가 다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 정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오늘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정말 요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걱정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이 저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들의 근무현황 지표를 살펴보면 작년 말에는 910명이었는데 2024년 8월 21일 기준인데 5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님께서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 의료현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에 가 보라 하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님께서 나서서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하셔서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이 모든 의료계의 문제는, 바로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전 공의들이 다 환자의, 현장을 다 떠나 버린 상태에서 모든 의료가 100%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 의료, 난치병, 적어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정말 우리 현장에 남아 계신 전문의님들, 돌아오신 전공의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또 의료기사님들 정말 총력을 다해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 의료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현장에서는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맞습니다. 그 의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박지혜 위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 답변 포함해서 20분 시간을 질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보충질의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태가 계속 됩니다. 작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의료 뺑뺑이?

○박지혜 위원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시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

○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중증 의료 환자 치료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국무총리님, 답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영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께서 금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오늘 이렇게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드리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민생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22대 국회가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봤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뼈아픈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그리고 탄핵 또 위험적인 청문회, 근거 없는 계엄령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후 독도 조형물 교체를 독도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신천일과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정부에 매국노가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무위원님들, 총리를 포함해서 다 오셨는데 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경제부총리님, 혹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장관님 중에서?

저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정부 각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 챙기는 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이라는 걸 정말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청년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평평 쓰고 빚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우리 정부가 그 기초를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채무가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부실은 저는 국가적 재앙이자 우리 국민들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측으로 돌려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올해 2025년 예산안을 677조 4000억 규모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평균 8.7%의 상승에 비하면 정말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고 또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또 4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물려받았는데 이 국가채무비율을 약 12%로 상승시킨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국가채무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면 보험료라든지 연금지출, 막대하게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즉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22년 그때의 상황을 한 번만 되돌아보면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는 아마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빛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렇게 가면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약 2.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큰 무리 없이, 국민들이 정말 부담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과거처럼 우리가 제로 퍼센트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재정에 대한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속도를 그대로 간다면 아마 훨씬, 우리 국민들의

이런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를 해 보니까 그전의 속도로 그대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2027년 현 정부가 끝나는 해에는 부채비율이 과거 2020년 기준으로 70%가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70%라는 것은 대개 세계가 생각하는 약 60% 정도의 최고의 부채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높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정부도 최대한 절약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통의 그런 노력을 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칠이 2차 대전 때 얘기했듯이 땀과 눈물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획은 지난 정부가 끝났을 때가 49.6%인가 49.4%인가 그렇습니다, 부채비율. 그것이 전 정권 시작했을 때 36%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 14%가 늘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만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20년 그해에 재정적자를 내고 그다음부터 바로 선진국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에는 12.8%를 늘렸지만 2022년에는 6.7%로 6.6%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6.6%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2023년……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계속 2.4% 그리고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부채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 보니까 저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2%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다 부채를 그다음 해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간 동안—우리는 6.6%를 2020년에 늘린 다음에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12.2%를 늘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고가 나온 거지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70% 예측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고통은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거의 아마 부도 사태에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시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부채를,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아까 GDP 기준을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015년입니다.

○조지연 위원 15년?

○국무총리 한덕수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들을 또 하고 있고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건전재정을 이어 가려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도 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겠지만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을 추경보다는 계속해서 기금 활용이라든지 기금 간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한다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아마 금년 세수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지연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금년 세수 상황은 저희가 지속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대응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오전 질의에서 국세 수입 결손과 지방교부세 교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히 이해할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는데 행안부차관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작년 56조 4000억 원, 국세 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한 논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9.24%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재추계를 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서 교부세도 법정 비율대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서 배정된 예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지연 위원 혹시 부총리님,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보류를 했고요. 어차피 내국세에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것을 어떻게 이 부분 배정을 유보하느냐 아니면 정산하느냐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일단 만약에 23년도에 전액을, 11조를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이걸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25년도 가면 지방예산에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3년도에는 8조 그러고 나서 25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는 악영향이 적도록 지방의 어떤 여유 재원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세수결손이 안 나온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고통은 분담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조정 과정은 아까 행안부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연 위원 이어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세수결손의 유발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들 하는데 세수결손의 원인에는 당연히 경기둔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덜 걷힌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세 이런 것이 감소한 것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세가 우리 정부 출범을 할 때 원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과세표준구간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율은 각 구간별 1% 인하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국가들 역시도 법인세율을 내려서 우리나라보다 더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기둔화로 인해 법인세가 덜 걷힌 걸 두고, 그 결과론적인 걸 보고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이 감세정책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감세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다시 경기의 마중물이 되고 또 그 경기의 마중물이 되면서 세수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다들, 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져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민간 중심의 경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그 주요 지표들을 다루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어려운 우리 상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서 가지고 앞으로 이 지표상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 피부에도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거기는 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금의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 저는 문제인 정권 때 탄소중립 선언 뒤에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금을 막 과다 투입해서 기금을 탕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자기금에 1조 6000억 원 빚지고 또 이자 부담을 막 이렇게 몰고 오고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 드러났겠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수를 받아서 또 빚지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6600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오전 질의에도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수부족이 나온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국가채무를 늘려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 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차선책으로 정부의 내부에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부거래를 조정했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이 사실은 대외적인 이자 부담은 아니지만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도 저희가 공자기금을 예를 들면 부담이 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부담이 준 측면도 있어서 공자기금 전체로

왔을 때도 그 이자가 증가한 게 없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전체의 재정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지연 위원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조건 지출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절감된 재원으로는 약자복지라든지 국방, 치안 그리고 국가 근간의 어떤 본질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도 했겠지만 생계급여가 문제인 정권과 비교해서 3년 만에 41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생계급여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애수당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렸습시다만 아직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획일적이고 대규모 재정지출에만 치중했던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을 한 건 맞는데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서 여전히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현장을 통해서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영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줘……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허영 자료제출 요청입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영 임미애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오전 질의 중에 행안부차관에게 지방채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각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규모와 발행일과 그다음에 내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전국으로 공문을 뿌려서 나름 수집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영 행안부에서는 임미애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자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취합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안부차관님, 아까 오전에 임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교부세 관련해서—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지방에 보낸 것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지방에 보낸 게 아니라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냐는 말씀이에요. 지방에다가 확정된, 배정된 예산을 보냈냐는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기재부로부터 교부세가 감

액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전자문서를 통해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임미애 위원님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행안부나 교육부에 기재부로부터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니깐요.

속기록 다시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신영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일,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정까지…… 아까 박정 위원장께서는 자정까지 내라고 하셨는데 자정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셔서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임미애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행안부에서……

○**신영대 위원**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보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이 있어요.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감액된다는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추정된 예산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도 기재위 위원인데 지난번 기재위 회의할 때 김윤상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을 주고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때 공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적 문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보낸 것은……

○**신영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부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은 저희가 작년 9월 1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브리핑이면 끝나는…… 정부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브리핑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영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행안부차관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친일 관련된 국무위원과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공직자들의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의심을 사게 되고 걱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새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 내용 다 보셨지요? 다는 못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교과서는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검정 통과했고 오늘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 내용, 어쨌든 최종적으로 장관님께서 검정 결재하시면서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검정이 워낙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검정심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영대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정의 최종 승인자는, 결재권자는 이주호 장관님이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만 검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 전체를 받으려고 했더니 잘 안 줘요. 그래서 일부 복사만 해 갖고 왔거든요.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을 두고서—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다 끝난 분인데—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내용이 있으면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글을 보고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면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배운성, 김용제, 김동인, 서정주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중 한 명을 정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 보자’.

장관님,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게재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번 검정에 합격한 모든 역사교과서는 2022년……

○신영대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과 중립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 준거로 해서 전문 검정 위원들이 검정심사를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걸 자세히 보시고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도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건 빠지고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때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이 자국 역사교과서 왜곡할 때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독재는 독재인 거지요? 독재는 독재가 맞는 거지요? 독재란 표현이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맥락을 좀, 전체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재’라는 표현을 다 빼고요 ‘장기 집권, 집권 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4·3사건 왜곡도 심각합니다. 다른 역사교과서에는 ‘전체 도민 10%에 달하는 주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쓰여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의 후소샤라는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에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한승수 장관께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당시 김재원 의원께서는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운동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즉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사실을 줄이고 사실을 감추는 이런 역사교과서의 왜곡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가 좀 봤어요.

이번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필진들 누구누구인지 대충 아시지요?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이병철 역사 교사하고 배민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한 분은 저희 교육부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누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성함이 제가……

○신영대 위원 장관 보좌관이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이름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잠깐 성함을……

○신영대 위원 장관님이 임명 안 하셨나 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장관님이 보좌관 임명 안 하셨나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했습니다만……

○신영대 위원 대통령실에서 임명해서 내려온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름을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잠깐 착각을……

○신영대 위원 아닐 겁니다. 그 두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병철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예전부터 좌파가 미디어를 장악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용단폭격하듯 비난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분은요 배민 교수라는 분 역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비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검정 교과서 내놔고요, 이 검정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원래 역사교과서를 내려면,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최근 3년간 관련 도서를 한 권이라도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왜 만들었지요? 자격 조건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자격 조건에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자격 조건이 왜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출판사가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를, 자격을……

○신영대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출판사는 어떤 경우였냐 하면 3년 전에 없었어요. 없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인데 이 관련 출판 실적이 전혀 없는데 교육부에 검정 공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2007년에 냈던, 오래전이지요. 2007년에 냈던 기출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서 출판했습니다, 이것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것을 인정해 줘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과서를 제작해서 검정 교과서 신청한 겁니다.

이제 확인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신영대 위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한 건데 여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평가원에서……

○신영대 위원 잠깐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보좌관으로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성함을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일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대 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책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에 계셨던 분이, 한국학력평가원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장관님 보좌관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청년보좌역이라고 해서요, 매일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신영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에 통과했다고 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의 지적도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교과서를…… 일본이 과거 역사,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왜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검토에 합격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누가 한 말씀이신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우리가……

○신영대 위원 누가 한 말씀이신지……

○국무총리 한덕수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국정의 지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영대 위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대 위원 계속해서 하시는 이런……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신영대 위원 총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취지는 여러 차례 설명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념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하셨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반국가세력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여쭙볼게요.

총리님은 뉴라이트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요. 아니, 뉴레프트도 있나요?

○신영대 위원 뉴라이트 아시냐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면 뉴레프트가 있나요?

○신영대 위원 총리님,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모든 언론에 도배되고 있고 뉴라이트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들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 본 적 있다랄지 그리고 이 이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다랄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뉴라이트하고 뉴레프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전혀 가치가 없는……

○신영대 위원 논쟁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가치가 없는, 이념이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뉴라이트라는 것은 실제 보수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영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어느 신문에 뉴라이트의 개념이 뭐냐 그러는데 무슨 친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엉터리 같은 데피니션(definition)이 나오고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정확히 압니다. 1964년에……

○신영대 위원 총리님, 들어 보십시오.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지 뉴라이트는……

○신영대 위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드릴게요.

한오섭 전 정무수석비서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게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왜 알아야 됩니까?

○신영대 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이분 한 분이 아니니까 몇 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메시지 담당하셨고요 당선 이후에 대통령비서실 초대 국정상황실장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정무수석비서관 하셨던 분이 한오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에 은퇴하셨던 장제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이분은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고요. 윤핵관으로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에 올라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뚝으로 임명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준 교수 그리고 정승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도 뉴라이트 명단에 올라간 분입니다. 특히 정승연 비서관 같은 분은 자신의 저서 ‘일본 동행과 극복’에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피해의식, 강박관념 또 열등의식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계십니다.

또 뉴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더라도요.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모릅니다.

○신영대 위원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관심도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뉴라이트 계열의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촛불 집회에 반발하면서 결성한 단체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신들도 정부 곳곳에 계십니다.

자유회의 창립선언문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총리님은 인정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을 집단적 개체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누구누구 계신가 말씀드려 볼게요.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현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 김주성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한국자유회의에 속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념보다…… 최근에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여쭙보니까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 지금 뉴라이트 얘기할 때냐,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저한테 일체 답변시간도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신영대 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 이런 분들이 여럿 계신데, 아시잖아요. 이번 김문수 장관님 얘기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제청 관련해서 국무위원 제청할 때 총리님 권한 행사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 김영호 장관님이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청하신 건가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한덕수 예, 시기가 되면 당연히 단계에서……

○신영대 위원 그분들 제청하신 건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단계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적절한 제청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분들이 지금 그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그런 말……

○신영대 위원 그러면 총리님, 그렇게 표현하시면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마시고……

○신영대 위원 총리님, 우리 장관이나……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장관이나……

○국무총리 한덕수 국정의 원칙이 중요한 거지요. 아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기를 보세요.

○신영대 위원 장관이나 인사를 할 때는 그분을 판단할 때 지금 얼굴 보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분이 지금……

○신영대 위원 미래 비전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분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임명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저분이 이번에 뭘 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신영대 위원** 총리님도 어떻게 총리가 되셨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신 경험을 살려서 총리로 임명되신 거고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원칙을 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안을 만드신 분이예요. 그게 도대체 뉴라이트와 무슨 상관입니까?

○**신영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론을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모두 반헌법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양상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우리의 국민을 제발 색깔 칠하지 마세요.

○**신영대 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대통령 만나셔서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인사들을 배척할 것을 건의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건 이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국정의 원칙을 자유민주주의와 지성에 기초를 뒀 가지고 국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체주의 밑에서 국정을 해야 됩니까?

○**신영대 위원** 총리님, 총리님께서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과 총장을 제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과거는 필요 없고 앞으로 업무를 해야 할 미래 비전만 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지요. 지금 그분이, 지금이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통일 방안을 만드신 분이예요, 위원님.

○**위원장대리 허영** 한덕수 총리님!

○**신영대 위원** 제청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 제발 색깔 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허영** 한덕수 총리님!

○**신영대 위원** 그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오늘 선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언도 하셨잖아요. 국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을 도대체 가르치는 게 그게 오늘 선언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허영** 신영대 위원님,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가르치고 있지……」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 한덕수** 국정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영** 총리님!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 시간 준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는」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 한덕수** 아까 시간 준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영 오늘 22대 국회 첫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기관장 여러분들과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시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들을 충분히 보장을 드리겠는데, 미처 못 한 부분들까지도 위원장석에 있는 위원장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이신 총리님의 답변 태도는 부적절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몽에서 깨지 못한 한 인간이 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년도 예산안 때부터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경제성장률 몇 %로 올렸지요? 2.5%지요. 그것에 기반한 세입 기반 마련했어요, 세출 짚고요.

그다음에 상저하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OECD, IMF 그다음에 KDI, 한국은행 다 경제성장률 낮출 때 한 번도 꺾지 않았습시다. 상저하고 계속 주장하셨지요? 세입 기반 건들지 않았습시다. 당연히 세입 기반이 무너지는데도, 6월 달 재정 빨간불 들어왔는데도 고치지 않았고 9월 달에 세수 재추계하셨지요, 부총리님?

그다음에 국세 수입 56.3조, 56.4조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내국세 52조 세수 핑크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교부금 다 연동돼서 불용 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18.6조.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 났습시다. 국가부채 60조 늘어났고요.

24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7월 말 현재 국세 수입 8.8조, 전년 대비. 그러면 23조 올렸지요? 세입예산에 23조 올렸으니까 이대로 가면 32조 정도 세수 핑크 예산이 된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추계 중이니까 9월 달……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핑크 예산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은 그렇게 예상……

○김영환 위원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이대로 가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대로 가면 그렇습시다.

○김영환 위원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핑크 납니다.

관리재정수지 6월 말 103.4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6월 말 누적으로 103.4조 기록한 게 코로나 빼고 있습니까? 없지요? 월별 관리재정수지 다 나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400조 부채 얘기하셨어요. 어떤 데이터예요? 누구 데이터예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400조 부채 누구 데이터입니까? 짧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절대 규모로서 부채가 늘어난……

○김영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냐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저희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월별로 국가채무 다 잡히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월별로요?

○김영환 위원 예, 월별로도 국가채무 다 잡혀요.

○국무총리 한덕수 이걸 연별로 다 잡히지요.

○김영환 위원 월별로도 잡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그러겠지요. 그건 제가 그렇게……

○김영환 위원 재정동향 보시면 다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은 사실 5월인데 2016년 말 기준으로 5년 동안 343.8조입니다. 그 안에 코로나 위기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까지 넣어서 윤석열 정부 383.2조입니다. 어디가 더 늘어나요?

22년도 5월에 62조 추경 했지요? 총리님, 기억하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2조, 팩트만 확인하는 거예요. 팩트만 계속 확인할 겁니다. 62조 추경 했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김영환 위원 그 전에 16.9조 1회 추경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62조 추경 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

다. 62조 추경 했지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찌됐건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재정동향 안 보셨어요, 월별로 나오는 것?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부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늘었다니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관리재정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김영환 위원 관리재정수지 플러스 국가부채가 늘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때는 오히려 국채를 갚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팩트입니다.

○김영환 위원 보세요. 예산안 대비 보세요, 예산안 대비.

○국무총리 한덕수 그건 팩트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대비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23년도를.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2022년 추경은 국채를 오히려 줄였어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산안 대비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국가부채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5개년 동안에 383.2조. 400조 원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하세요.

다음, 우체국보험적립금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김영환 위원 부총리 같이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회계-기금 간 거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예수·예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차입했어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도 디브레인 코드에 코드가 없다, 그래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4조 1항은요…… 2조가 세입, 3조가 세출, 4조가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고 민간인들이 적립한 적립금을 따로 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내에 구분 계리돼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조달특별회계 그게 유일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계정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특별회계 밖에 있습니다. 적립금 계정은 밖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조 1항 3호에 보면 차입해야 돼요. 왜? 국가 내의 회계-기금 간 거래면 저렇게 둘 수가 없지요. 적립금은 국가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왜 국가로 대출해 줘요, 그냥 국가 없애지? 국가 내 회계라며요? 회계-기금 간 거래라며요?

그다음, 지금 국가재정법 13조 1항을 보면 전입·전출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1호에 딱 박혀 있어요, 국가재정법 13조 1항 1호. 그래서 적립금은 민간 적립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13조 1항 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22년도 국가회계편람 이게 기재부가 작성한 겁니다. 뭐라고 해요? ‘예금 가입자와 보험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저게 국가회계편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부가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구)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6조 1항 2호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탁. 차입 아닙니다. 예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주장이 ‘선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세요. 2007년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2007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의 예탁 부분을 보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1항입니다. 1항의 제8호에 예탁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차입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탁이라고 쓰여 있어요? 회계-기금 간 거래면 예탁이고 민간자금이면 차입금입니다. 예탁이라고 쓰여 있지요? 그런데 그것 없어졌어요. 23년 법은 그냥 국가, 개체화한 국가. 민간이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이렇게 차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입금은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되지요.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국가부채에 계상을 해야지요. 왜 2007년 (구)공공자금관리법

가지고 전례가 있다…… 23년도 법이 달라요. 계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차입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브레인 코드 찾아봤어요. 예수금, 예탁금 있어요. 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내부거래라면서? 있어요, 코드. 실무자 재정관리관,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회계 내인데.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지출을 올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별도로 또 디브레인 코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2500억 원은 어디 있는지 회계-기금 간 거래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년도 우체국보험금을 왜 끌어다 썼을까? 왜 공자기금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기금으로 바로 보냈을까? 정보통신기금이……

그다음 보여 주세요.

공자기금은 일단 20%가 넘어요, 2500억을 갖다 쓸 때는. 왜냐하면 자체 변경을 하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2500억 갖다가 공자기금에서 다시 쏘면 넘어가지요. 그 한계입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렇게 하라는, 민간보험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체국보험계정 운용 수익률을 보니까요 5.12%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했어요? 4.04%. 그러면 우체국보험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나머지 이자? 부총리님, 민간에서 갖다 썼는데 이자도 덜 줘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부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민간차입금으로 하고.

다음,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순자산이 2조 정도 마이너스예요. 부채/자산 비율이 800%가 넘어갑니다. 안정해요, 민간보험금 갖다 쓰는데? 그래서 이 보험상품을……

그다음 보여 주세요.

이건 원상복귀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쫓는다고 얘기드렸어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시정조치 요구를 넘어서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회계감사까지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까지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교부세·교부금 문제인데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해서 45.7조인데 세입 여건 변화 16.8조 이게 교부세·교부금이예요.

국가재정법 43조 5항에 기재부가 늘 쓰는 게 있습니다,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 보류한다’.

그런데 부총리님, 저하고 식사하면서 가게에 밥값 내야 돼요. 그런데 부총리님이 먼저 내셔야 돼요. 나중에 정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만나서 그 뒤에 지갑에서 돈을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정산이지요? 음식점에는 밥값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그래요.

그다음, 지방교부세법 5조 3항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정산은 다음 다음 연도에 하는 겁니다. 당해 연도는 어떻게 해요?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당해 연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회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가 1년 단위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보류, 유보하면 1년 단위에서 끝나야지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시켜 봤어요. 그러면 회계는 1년 단위로 끝나요. 유보, 보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회계 안에는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은 줘야지요. 그리고 법적 의무지출이예요, 여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용 처리한다? 그리고 정산은 다다음 연도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정산을 미리 한다? 법 위반입니다. 부총리님, 국가재정법 위반이예요. 어떻게 국가재정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 심의하고 확정된 예산,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재정법을 그렇게 과도하게 남용해서 해석을 하나요? 그것은 확정권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위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54조 1항.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쓰면 되니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지방에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의 2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성남 화성 등 불교부단체 3.3조 원,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예요.

적립금 없는 지자체 수는 몇 개예요? 19개 있지요? 20억 미만이 12개, 100억 미만이 또 12개, 101억에서 500억 사이가 72곳입니다. 그러면 교부세 안 주면 저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내실을 통해서 다 확정된 예산을?

그래서 23년도에 어떻게 됐냐? 지자체 용자원금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갚는 겁니다. 얼마 갚아요? 7.6%밖에 못 갚아요. 그 전년도에 140% 갚고 그 전전년도에는 198.9% 갚습니다. 23년도에는 지방채로 못 갚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예요. 아님, 부총리님은 지방재정을 어떻게 알고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법정배분비율도 틀려요. 원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97 대 3으로 지방교부세는 배분되게 돼 있지요? 그런데 틀려요. 특별교부세가 지금 3.3%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왜? 특별교부세를 더 넣었으니까.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님, 교육청은 또 틀린 게 있지요, 교부금 내려갔을 때? 특별교부금 배정비율 6:3:1 맞아요, 틀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맞아요? 맞게 내려왔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연초에 저희가 국가 시책 쪽은 미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맞추지 못했지요? 그게 법정배분비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정배정비율이지만 좀 불가피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뭘 불가피해요? 불용 처리했으니까 그렇지요. 세수 펄크 나면서 그걸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위원장님, 지방교부세법 위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이것도 하나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정진기금 말씀하신 걸 답변시간을 주셔야 2차관도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분도 안 남았는데……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립도, 자주도가 낮다.

2차관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우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금 배정을 유보하거나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환 위원** 세수 핑크는 본인이 냈잖아요, 기재부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리고 첫 번째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 관련된 부분은, 우선 이 부분은 세수결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진기금이 부족해졌고…… 공자기금에서 정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지원을 했고요. 그러고도 정진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예산 외로 따로 운영한다는 거지 이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가재정법 13조를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원 회계감사 및 국가재정법 위반, 권리남용으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영** 예, 2차관님, 추가적인 답변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세입세출 외에 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구성 요소라는 게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관련 법 제5조에 따라서 과기부장관이 관리·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하위규정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1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저희가 전입·전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이자율을 주고 정진기금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빌려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목과 관련해서 기타 민간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 기술적으로 예수금이나 예탁금 비목을 쓸 수가 없어서 기타 민간 차입금 목을 썼다는 부분은 지난번 기재위 때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회계-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차입금 국가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들어서 첫 번째 예결위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게 됐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입니다.

우선 총리께 질의하기 전에 김영호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장관님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일부 주변 인물에 대해서 친일파로 아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되는데요. 뉴라이트 운동이 있었는데 그 취지와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당시 있었던 뉴라이트 운동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자고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학자들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어 왔던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한 학문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친일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뉴라이트파가 친일파라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아주 해묵은 친일 프레임으로 한일 협력 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는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엄태영 위원**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등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뭘 지우고 뭘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염태영 위원 아무튼 희귀한 논리를 만드는 데는 참 아주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와 독도주권수호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보면 2017년 1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9000만 원으로 깎더니 2019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2년 연속 깎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하는 굴종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하기를 당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정치선동에 나서는 행태 그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좀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위원 또 민주당이 최근 서울시 지하철역과 성남시에서 오래된 독도 조형물과 영상을 교체하기 위해서 잠시 치운 것을 두고 독도 지우기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친일몰이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의 선전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염태영 위원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의 DNA는 민주당의 오랜 전유물입니다.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는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화합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그동안 괴담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큰 사회적 비용까지 치른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괴담을 퍼트려서 국민을 선동했지요. 따라서 3조 7000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괴담으로 참외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때에도 야권은 세습 우력, 방사능 명게 등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트렸고 이에 대한 팩트 체크, 조사 비용으로 3년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정치는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나 국민 혈세도 수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거짓 선동정치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훌륭한 국민들이 그 모든 잘못된 정보와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영 위원** 22대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투리로 얘기하면 더 매란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안보에도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지요. 대통령께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반국가세력이 거짓 선동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것이 다 조작된 사진입니다.

총리님, 반국가세력들이 거짓 선동정치에 편승해서 가짜뉴스와 괴담 확산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도 문제입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영상물을 거르지 못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적어도 마약에 버금가는 우리의 모든 처벌과 차단과 교육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AI가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생활을 더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영 위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정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 치밀하고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댐 건설에 관련해 알고 계시지요? 댐 건설 시에 선 지역합의 후 계획확정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총리님, 질의에 앞서 사진 한번 보시지요.

해당 사진은 1990년도 9월 늦장마로 인해서 단양군 시내가 잠긴 모습입니다. 당시 수해로 인해서 1000여억 원의 재산 피해와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정부가 시인하면서 분노한 단양군민들이 농성까지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당시 충주댐 하류인 서울에 홍수 피해가 있을까 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방류를 자제시켰고 따라서 물이 역류해서 단양군 시내 전체가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단양은 1895년에 완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전국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수몰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소재지 전체를 이주하는, 그러니까 구단양 전체가 신단양으로 이주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몰 이전에, 1983년도에 7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고 현재 2만 8000명 정도로 전락해서 지금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댐 건설에 따른 수몰의 상처가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천만관광시대를 열면서 어렵사리 지역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단양을 지난 7월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단양군 전체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명 내외 군민들이 모여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뭐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환경부가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만들고 지금 다 여론수렴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염태영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댐 건설 정책이 반복되는 수해와 가뭄 피해로 인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정부 정책에 여당 위원으로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양 지역은 충주댐 상류에서 온갖 규제와 감시 또 침수 피해를 40년간 겪어 왔습니다.

한 석 달 전에도 행안부장관께서 오셔서 가지고 달맞이길의 상습 침수 지역에 도로가 침수되는 것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다녀가시고 수자원공사 사장까지 함께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그 해결책을 위한 설계비를 세운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어떤 일말의 상의나 귀뜸도 없이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키웠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이런 일들이 계획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태영 위원 아직도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국무총리 한덕수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

○염태영 위원 14개 지역의 발표 지역이 다 가지각색입니다만 지금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2013년도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해서 선 지역협의 후 계획확정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부는 기습 발표도 모자라서 사전검토협의회까지 폐지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 건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도 사전검토협의회 보고받고 폐지 찬성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선 지역합의 후 계획확정이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님, 우선 총리로서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충분히,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다음,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댐 후보지 발표 후 이를 반기는 지역도 있지만 단양군처럼 수몰의 상처가 깊어서 반대가 극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댐 건설은 사회적 갈등이 심해서 정부가 주의 깊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댐 후보지 안을 마련할 때 단양처럼 역사적인 상처가 깊은 곳은 일단 배제하거나 사전에 주민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 단양 주민들은 댐 하면 냄비 뚜껑만 봐도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 단양입니다. 저희 지역도 충주댐으로 인해서, 충주, 제천, 단양이 있습니다라는 단양같이 이렇게 피해를 오래 본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댐 주변 지자체 중에서 아마 단양이 최고일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안에 포함시켜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점, 장관님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한 말씀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기후대응댐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주댐 저희 잘 알고 있고 27억t 규모의 대규모 댐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댐은 2600만㎥이기 때문에 그 충주댐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선 지역합의 후 계획확정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단양의 경우에 수몰의 상처도 있지만 댐 건설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큼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19곳 중에 지난 3년간 사용료 및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충주댐의 경우—저 도표에서 보이지요—전체 사용료 수입의 37%를 충주댐에서 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대비 지원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성덕댐은 사용료 수입이 0.1%인데 비해서 사용료 대비 지원은 177%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댐 건설을 위해서 지역의 희생을, 양보한 지역이 이렇게 이익도 없이 피해만 계속 보니까 향후 지역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사용료 수입의 절반 정도라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체계 개선을 환경부장관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하나 더 한강수계기금, 제가 지자체장 할 때부터도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더군요, 보니까. 장관님, 댐 지원 예산도 문제지만 상수원 보호, 상류지역의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 관련 기금의 재원 분배도 한번 기준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5년간 기금으로부터 2396억을 지원받았더군요. 제천은 광주시의 33% 790억, 단양은 13% 313억을 받았습니다.

충주댐은 서울시민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댐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규제받아 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수처리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예산심의 전까지 본 의원실에 장관님, 수계관리기금도 함께 검토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우리 여야 의원들 5명에서 미국의 은퇴자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선시티하고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빌리지 다녀왔는데요. 총리님도 50년간 열심히 일해 오신 분인데 이제 곧 은퇴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 70년 전부터 3000여 개 은퇴자마을이 있고 일본도 생애활약마을 조성을 지금 정책 차원에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의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돼 있고 교통이 돼 있고 또 문화가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을 정부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예, 현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지난 8월 초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들과 면담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7월 20일 여순사건법이 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이 돼서 여순사건위원회 출범하

면서 우리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컸었습니다.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그런데 당장 해 보니까 2년이 지났습니 다라는 희생자·유족의 결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총 7546건의 신고건수 중에서 9.4%인 708 건만이 현재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기한은 10월 5일로 불과 한 달여밖 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안에 진상규명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하여튼 최대한 그 속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내 보고, 위원님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문제도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총리님, 희생자·유족의 결정과 별개로 진상조사 기간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한 달 뒤에 보고서 작성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리께서도 면담 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출범부터 6·25 전쟁 시기의 한국사, 전쟁사와 같은 이런 연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주철현 위원 기한 연장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에 지금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이 시행령의 기간도 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희생자 중에서 여순사건지원단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고로 제주4·3사건법도 7차례에 걸쳐서 무려 23년 이상 연장을 했더라고요.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해서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기간도 연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다른 사례도 한번 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조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중앙위원회 조사 인력이 3명뿐이어서 희생자·유족 결정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을 새로 늘리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으로는 부족하다, 제주도 7명이었으니까 우리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예결위 때도, 예산 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19일 76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전남 보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합동추념식인 만큼 우리 유족들은 총리께서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급적 참석하시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가급적 참석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어디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뒤에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순사건법 기한 연장 개정 좀 빨리해 주시고요. 시행령도 개정해서 신고 기간 연장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 예산 불법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디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기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국가재정법은 국가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법률입니다. 기재부장관께서 국가 예결산을 총괄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 법은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주철현 위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법 6조에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에 대해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주철현 위원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배제 받는 법률 규정이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아마 검찰청을 말씀하시는……

○주철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검찰을 특별히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법을 보면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이 다른 외청하고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청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법령에, 정부조직법 3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도 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다가 검찰총장을 포함한다라고 했다가, 이런 정부조직법의 정신을 담아 가지고 이 문구를 논의하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려면 이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국가재정법이 재정에 관한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에 분명히 ‘중앙관서라는 것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의 ……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못을 박고 있고 이 검찰청이 중앙관서의 예외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없는데 엉뚱한 법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정부조직법을 엉뚱한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국가재정법이 재정과 관련된, 예결산과 관련된 특별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예외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국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결산심사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또 22년도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당시에 법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부총리께도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그것을 시정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가면 누구나 인정하는 딱 떨어지는 불법행위입니다.

차례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58조에 따라서 결산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은 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중앙관서 명단인데요.

부총리님, 여기에 검찰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주철현 위원** 그런 논리를 펴시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명백하게 중앙관서장에 포함된 검찰총장이 빠져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국가재정법 당시의 속기록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총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구는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당시에 그 부분이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로 검찰청을 예외로 하려면 예외규정을 뒀어야지요. 중앙관서에 검찰총장은 빠진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을 못 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법에 따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에는 국가재정법에다가 중앙행정기관장에 검찰총장을 포함한다고 넣었다가 그걸 못 넣은 겁니다.

○**주철현 위원** 넣었다가 빼도 원래 지금…… 아니, 그런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아까 중앙관서의 개념에, 국가재정법 6조 중앙관서의 개념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딱 뜻을 박았어요. 여기에 그러면 검찰청이 해당 안 됩니까?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명백히 검찰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예외규정을 안 뒀다고 해서 그게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검찰사무가……

○**주철현 위원** 아니, 정부조직법은 일반법이고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우선법이라니까, 특별법이니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우선이지만 해석을 할 때 정부조직법과 한꺼번에 해석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상에서……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관서의 개념을 정할 때 검찰은 예외로 한다고 정했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부에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국가재정법을 들이밀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총리, 기재부가 이런 권한 가진 게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에도 나옵니다.

○**주철현 위원** 정부조직법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재정, 예산결산 이런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직접 규제하는 법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명확히 하려면 입법적인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국회에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산심사 때—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그렇게 요구를 명시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정부조직법 갖다 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8년, 2019년도에 결산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개선하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리에 국회에서 결의로 시정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뚱뚱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검찰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과거에 국가재정법이 없을 때는 그래 왔는지 모르겠어요. 외청 논리, 내청 논리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그 법에 따라야지요. 과거 관행은 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관행이고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검찰국장의 권한으로 검찰 예산편성·집행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관행, 불법 관행을 계속해 오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국가재정법 제정 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제가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재정법 입법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국회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논란이 있었겠지요. 검찰 측의 반발도 있을 거고 법무부의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개념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의 직제령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을 핑계로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자질을 좀 의심케 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여기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법상 검찰청은 중앙관서가 분명하고 검찰총장이 기재부장관한테 예산을 신청하고 결산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누구나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시다. 왜 그랬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요, 조금 전에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입법 취지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그것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한 차원은 국회에서 하신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감사로써 이것을 접근해서 해결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주철현 위원** 그러면 감사원은 현재의 관행이, 불법적인 관행이 국가재정법에 합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재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유권해석하고 있는 기관을 존중하고요.

○**주철현 위원** 아니, 감사원이 도대체 뭘니까? 예결산의 편성·집행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저희는, 하여튼 같은 취지인데요……

○**주철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감사원이 왜 이것을 묵과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님께서서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기재부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 봐야겠네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래 볼까요? 그러길 원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이……

○**주철현 위원**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대세요. 아니,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의무를 기재부장관도 안 했고 법무부장관은 침해를 했고 검찰총장도 안 했고, 감사원? 감사원은 또 불법을 눈감았어요. 국회가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시다. 그래 놓고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와서 국민 앞에, 국민의 대표 앞에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철현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총리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들으셨겠지만 저는 법률가입니다.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었고 변호사로도, 시장으로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중앙행정기관이 한다는 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젓하게 되는, 이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께서도 그러시고 경제부총리께서도 이것이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입법적인 하자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마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위원님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예산과 연관돼서 기재부에서 각종 세법이나 이런 재정법에 대한 논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제기하셔서 뭔가 명확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예산요구서·결산보고서·재정집행보고서 제출 의무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관서장으로서. 검찰은 중앙관서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는 중앙관서장이니까 무조건 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각종 고유 권한과 의무를 법률 근거 없이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요. 기재부장관은 총장에 대한 예산안편성지침·예산집행지침 통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의 위법행위를 그대로 수용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가재정법 위반을, 앞장서서 어겼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또 국회에 제출해서 허위보고서를 보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감사원……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나……

○주철현 위원 아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관계부처하고 분명히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또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도 이들 기관의 불법적 예산편성·결산집행을 눈감아 뒀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심각한 위법이 있는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허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죄고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행사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마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 박정 의사진행발언, 자리로 돌아가서 하시지요.

○주철현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가서 잠깐만 바로 이어서, 관련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 위원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 한 바와 같이 검찰 예산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기재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국가재정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노골적인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권한과 의무 일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찰총장은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중앙관서장 중 유일하게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말 그대로 검찰 독재국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해서 직접 따져 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만이라도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원칙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정 예,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저도 짧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주질의가 끝나고 방금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첫 일정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여야 간에 본질의 끝나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신다면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함이 다소, 우리 서로 간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까 싶어서, 우려될까 싶어서 지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구자근 간사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기하셨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이게 혹시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양당 간사에게 이것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예결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회에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본인을 정말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마치 왕좌인 양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1건의 역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 무시·국회 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위 사실 또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밝혀 낼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수의 유력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검사는 최악의 정치검사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브라질의 모루처럼 검찰의 법 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해서 소리 없이 스텔스처럼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고개 숙여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던 그 순간에도 윤석열 사단은 대권을 향한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검사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정치검사들에게 그릇된 야욕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전두환이었던 노태우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잘만 활용하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 할소냐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질의는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야?

○**황운하 위원** 들으세요! 질문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도입부예요.

○**엄태영 위원** 예결위 취지도……

○**황운하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독재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쪼어 보려고 합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디 계세요? 김민기 총장님 안 계신가요?

누가 계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사무차장입니다.

○황운하 위원 사무차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의 특활비 사건 알고는 계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황운하 위원 알고 있지요? 2008년에 여당 원내대표 할 때 특활비를 전부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가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80억 정도 됩니다.

국회 특활비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국회 특활비는 2018년 8월에 여야 합의로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감축하기로 하고 19년 예산에서 한 84.4%를 감액해서 지금의 9억 8000만 원이 그 당시에 됐고요, 2019년부터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위원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그러니까 2018년에 62억 7200만 원에서 2019년에 9억 8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황운하 위원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배경 중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눈 먼 돈, 쌈짓돈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황운하 위원 2023년 검찰 특활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7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제가 알기로 84억인데 72억이든 84억이든 그건……

○법무부장관 박성재 72억이 맞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황운하 위원 특활비 말고도 수사비라는 게 따로 있지요? 검사 하셨으니까 아실……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정업무경비를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아까 국회사무차장도 답변하셨지만 국회도 특활비를 폐지하고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전환했고 이렇게 전부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 안 하고 영수증도 폐기하고 있는데 장관님,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추비 집행내역 이것 숨김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수활동비는 그 본질이 기밀 유지가 필요할 때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저희들……

○**황운하 위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하려고 투명성을……

○**황운하 위원** 회식비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렌탈비,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지적해서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슨 기밀수사가 어디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부러 다 언론에 흘리면서 뭘 기밀수사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격려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또 받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국민 앞에.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2017년 이후로 18년부터 검찰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거 왜 공개를 안 하세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개 부분은 지금 그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그 지침을 직접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국회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에도 검찰 특활비는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자료를 저희들은 낼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개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운하 위원** 저도 평생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솔하게 특활비 써 봤고 수사비 써 봤습니다. 검찰이 공개 못 할 특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해지세요.

또 이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고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업무비로 활용을 하면 되고 검찰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현금 지출 문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은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황운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카드, 계좌 이렇게 다 하고 있나요? 어때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카드, 계좌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용도로 쓰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황운하 위원** 그렇지 않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사

건에서 어떻게 기밀이, 뭐 어떤 기밀이 유지되는지, 어떤 수사에서 왜 현금으로 썼는지?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개되는 게 옳지 않은 그런 수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으로 하는 거는 마약 관련된 활동 수사라든지 아니면 휴민트 관련된 관계 유지라든지……

○**황운하 위원** 검찰에 무슨 휴민트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또 저희들……

○**황운하 위원** 특수 수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등 현금성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황운하 위원** 제가 듣기에 구차한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있구나. 다 압니다.

또 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영수증을 가려서 제출하고 판결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참 오만하기 짝이 없지요, 법원 판결도 무시해 버리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법원이 이렇게 가리고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집행 내용과 수령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비밀 유지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기밀 유지가 어려운 검찰 활동이, 회식비 이런 게 기밀 유지가 어려웠요? 회식비에, 예약할 때 다 검찰청으로 예약해 놓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 그 부분 투명성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용도와……

○**황운하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특활비를 하나도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여전히 편법적으로……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활비가 검찰에만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운하 위원** 맞아요. 그래서 총리실도 마찬가지고,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총리실도 특활비 전액 삭감, 폐지해야 한다. 검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대표적이에요.

또 이렇게 자료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게 2017년까지는 그 규정이 없어서 자료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그 규정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언제부터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합니까?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수당, 관행에 따라서 허위 청구, 과잉 청구한 것 다 처벌해 놓고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셀프 불기소하고. 이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로 돈봉투 돌리고 기자들에게 돈봉투 만들어서 경품으로 나눠 주고 한우구이집에서 고급 한우 먹고,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특활비가 줄줄 땀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또 정치검사들의 기획수사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월성원전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월성원전 수사, 나중에 대법원에서 최종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월성……

○**법무부장관 박성재** 일부는 무죄가 나와서 항소 중이고 지금……

○**황운하 위원** 대법원……

○**법무부장관 박성재** 일부는 무죄가 났고 일부는 지금 1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 수사받던, 기소당한 공무원 1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무리한 기획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에 세금을 들여 가면서 그 일 한답시고 착수금처럼 격려금 내려 주고 중간에 영장 치면 잘했다고 또 격려금 주고 영장 발부되면 잘했다고 또 격려금 주고 그렇게 특활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런 무리한 수사 때문에 공무원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무죄가 돼요. 이런 검찰을 왜 세금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이니까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데 동의는 안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런 검찰한테 왜 특활비를 줘야 됩니까? 사람 죽이라고 특활비를 줘요? 생사람 잡으라고 특활비 줘니까?

또 현금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또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될, 0으로 만들어야 될 특활비를 소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연초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제멋대로예요, 검찰이 특활비 쓰는 것이.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1년에 여러 가지 검찰 내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1년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수시로 점검하고 저희들 감사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황운하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지금은 저도 그만둔 지가 칠팔 년 돼서,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저희들 검사 할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황운하 위원** 검찰의 수사 행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지금 장관님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우선 집행내역부터 국회에 소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못 할 집행내역은 없다고 봅니다. 검찰에 뭘 기밀수사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본질적인 게 뭘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밀 유지……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마약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납득되지 않아요. 장관님도 부서에서 써 주신 답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았습시다. 또 정말 개선 의지가 있다면 소상하게 제출부터 하세요.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특활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밀 유지 운운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검사들이 자금줄 대는 이런 검찰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특활비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드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발언은 조금 전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상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행내역.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좀 쉼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거부권 행사는 재의요구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조배숙 위원** 이걸 대통령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논의해 가지고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철저히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고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하는데 저는 그 거부권 행사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가 이제까지 재의요구를 한 21건은 대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맨 초기에 어떻게 통치 구조를 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육백삼십오 번 법안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횡수를 가지고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보면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이 집권 여당 때는 통과시키지 않고 야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통과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여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 한덕수 헌법 자체도 위반입니다.

○조배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예결위니까 검찰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법무 산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쪽?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검찰총장은 예결위에 여태까지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점은 여야가 바뀌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희들 국민의힘이 야당 때 요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지만 예결위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다가 부대의견으로 이진 아니다, 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정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해라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석해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취지로 2021년도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었고 거기서 배제된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똑같은 형태로 논란만 되고 있었는데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 논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논의에, 국회의 논의에 충분히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배숙 위원 법 개정 사항인데 법 개정하기 전에 이걸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채무 증가액과 기재부가 제시하는 규모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배숙 위원 총리님께서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까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인데요.

○조배숙 위원 아, 그래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위원님께서서는 예를 들면 2017년 결산에 나오는 국가채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은 했지만 5월 달에 집권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차 추경을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추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2022년의 예산 전체 시기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그 전 정부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국가채무 늘어난 것에. 그러나 2022년에는 전 정부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계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포함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부채, 5년 동안 늘어난 부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규모를 가지고도 하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자연히 작아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은 12.9%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인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2023년도 결산 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희의 책임으로 하고 2027년, 아직 임기가 끝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때의 장기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전망까지를 저희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5년 동안에 415조가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12.9%입니다. 이것은 2020년 새로이 GDP가 계산된 수정본에 기초를 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 2025년 편성까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2026년, 2027년의 장기 전망을 보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356.7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415조와 356조는 차이가 한 50조 정도 납니다만 GDP 대비 비율,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입니다만 대개 이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는 12.9%가 늘었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2.8%가 늘어날 겁니다.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큰 집중을 하고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최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9만 6000원의 생계급여가 늘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 한 해에만 21만 3000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162만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올해 2024년에 183만 원의 현금 생계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총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요.

저도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온 나라가 들쭉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까운 우리나라 근해를 오염시켜서 생선, 수산물 다 오염돼서 먹으면 큰일 나고 심지어 소금까지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핵 오염수 방류 이전에 제조된 소금이 안전하다고 소금 사재기를 해 가지고 시중에 소금이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피담 피해로 상인과 음식점 주인 하소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번요.

이게 소금 사재기입니다, 소금 사재기.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은 사겠다면서도 국내산 쌀은 사지 않는다 했는데 대한민국은 2013년 9월 이후에 명게를 비롯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일절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발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언론이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을 다 전달을 했고 그 당시에 좀 위기였었지요. 수산업은 정말 완전히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됐다는 게 나타났나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뭐 이미……

○조배숙 위원 증명이 됐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때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보시지요.

분명히 2020년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것은 해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작년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밝혀졌는데도 그 뒤에 일체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몇 마디가 피담처럼 퍼져 왔는데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우리 국가 예산 1조 500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4만 4000번을 했고요. 그런데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돈만 1조 5000억입니다. 안전검사 비용은 10%였고요 나머지는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민주당의 선동이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돈입니다. 이런 선동으로 국민의 혈세와 국가 동력이 낭비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결국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성에 기초한 국정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과학과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부나 같이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결

국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 또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갖춰서 방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한, 지성에 기초한 그런 국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도 더 정치권에 대해서 설득을 열심히 하고 또 정치권도 좀 더 과학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서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행정부가 한 일들 그것은 저는 상당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IAEA하고의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일본의 그런 조사에 참여하게 해 주고 2021년 정도에 일어났던 이런 협상의 과정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팀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방류가 시작됐을 때는 그 장관들이 했던 그런 정책적 기조를 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 역시 작년에 지역방송에 나가 가지고 과학적인 안전성을 얘기했지만 패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느꼈느냐면 정치가 과학을 이긴다 그런 현실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사태랄지 그다음에 사드, 성주 참외 문제랄지 항상 이게 과학적인 것보다는 어떤 선동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또 그것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난번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백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연속되는 건데 그게 전 정부에서 결정된 좋은 결정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래서 100만 수산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조배숙 위원 피해를 입으셨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피해를 입고 우려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승계되고 얘기되고 이런 지성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치와 국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까 독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8월 26일 날 민주당에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안국역의 조형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저는 조선총독부 설립일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군의 날로 기념하게 된 이유는 6·25 때 1950년 10월 1일 날 국군이 최초로 삼팔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한 날을 기념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일본과 연결해서 친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이게 저는 너무나 일본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2018년에 11억 8008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6억 6200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치면, 독도 대응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런 논리로 치면 문재인 정부야말로 독도 지우는 세력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인데요. 저걸 좀 봐 주시면,

지금 저기 물고기 떼죽음 사진이 자료화면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진을 저렇게 띄워 가지고 국민들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 언론 탄압이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프레임을 켜고 있는데요.

발언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 국정 낭비가 심합니다. 손해도 너무 심하고요, 예산 낭비도 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예,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 같은 것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답변해 주신 총리님 또 정부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중앙부처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결산심사는 행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2023년도 재정과 관련된,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로잡아서 중앙정부가 올곧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책임도 추궁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 기재부장관께서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이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요 대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기업에는 근로자도 있고요.

○윤준병 위원 물론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

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로부터 사람한테 옮겨 가지고 대규모의 사망자가 났느냐 하는 점에서는 괴담이고요. 그다음에 모 방송이 그것을 보도했을 때……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그 우려들을 국민들이 표출해서 우리나라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광우병은 괴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옳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이런 점에서 옳은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언론이 광우병을 보도할 때 어느 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여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광우병이 아니라 다운병이라는, 다우너 병이라는 것에 걸린 소를 완전히 오보를 한 거지요.

○윤준병 위원 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 그다음에 두 번째……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언론에 보도된 한 건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 양……

○국무총리 한덕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윤준병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무총리 한덕수 이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총리님이 아마 노무현 정권, 정부 시절에 재정기획부장관인가요 그렇게 하셨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경제부총리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 당시 나온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수입위생조건 중에 30개월 미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이해하시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동의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이따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내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표출된 게 촛불로도 표출됐고 여러 가지 의사표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수용돼서,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30개월 미만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낸 거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염려했고

그 염려된 내용이 수용이 돼서 현재까지도 수입위생조건에 30개월 미만 소로 수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광우병 괴담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는 소위 노무현, 저희가 FTA를 하고……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준병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광우병 괴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도 이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쭙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어요. 위해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지요.

○윤준병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을 뿐더러 지금 방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안전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뭐가 분명해요?

○국무총리 한덕수 뭐냐 하면 처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준을 지킨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기준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이걸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게 IAEA도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IAEA만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한덕수 국제기구가 아닌 게 아니지요.

○윤준병 위원 왜 IAEA만 맹신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지요. 우리나라 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 전문가들도 하고 있잖아요, 검사를.

○윤준병 위원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들 내에서도.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지요. 우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총리님, 혹시 오염수 실제 음용해 보셨어요?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완전히 처리된 오염수를 가져오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로 호도를 했냐 하면 일본의 핵 오염수 안전하니 먹을 용의가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저는 지금도 마실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지 마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마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처리됐으면.

○윤준병 위원 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마시겠다는데 왜 위원님이 마시지 말라고 그러세요.

○윤준병 위원 예전에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이 이후에 드러나서 실제 위험성이 발견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한덕수 많다고 하시면 과장인 겁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살충제 DDT 또 석면과 관련된 내용 등등……

○국무총리 한덕수 그 DDT는 제대로 검사를 안 한 거지요.

○윤준병 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수년 뒤에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일본 핵 오염수도 이제 방류된 지 1년 밖에 안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당시에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당시에는 5년 뒤가 아니라……

○윤준병 위원 제가 질문하니깐 좀 들어 보시라니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시간도 안 주고……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하던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1조 6000억 혈세가 낭비됐다, 이거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건 맞지요. 왜냐하면……

○윤준병 위원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훨씬 검사도 더 많이 했고……

○윤준병 위원 그러면 이게 낭비됐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1조 6000억 삭감할 겁니까?

기재부장관님, 맞나요?

여기에는요 해수부의 16개 사업 3년 치를 누계해 가지고 1조 6000억을 계산했는데 오염수와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간 건 4%밖에 안 돼요.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1조 6000억 부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은 아니에요.

○윤준병 위원 아까 양곡관리법 물어보니까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거부권……’ 하시던데?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1건의 재의요구한 것이 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 하시길래……

○**윤준병 위원** 양곡관리법은 헌법 위반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정책 위반입니다.

○**윤준병 위원** 정책 위반, 정책이야 행정부만 정책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수립하는 가장 근원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정책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뭐, 좋고요. 그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확정해 준다고 들었지만 정책을 한다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윤준병 위원** 정책은요, 정책이 뭐니까?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 배분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행정부가 해야……

○**윤준병 위원** 행정부에서는 하위 내용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지요.

○**윤준병 위원** 그래서 ‘행정’인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윤준병 위원**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그렇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내세웠던 쌀값 20만 원 보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때 얘기했던 거는 분명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추수기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였잖아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면 총리께서는 수확기에 20만 원 보장했는데……

○**국무총리 한덕수** 그거를 1년 내내 20만 원을 유지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그게 약속인데 20만 원 이후에 지금 떨어져서 한 18% 떨어져 있는데……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떨어져서 곧 우리가 또 대책을 해 가지고 추수기에 20만 원……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수확기에 쌀값 20만 원선 유지하고 아닌 시절에는 쌀값이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방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방임이 아니고요. 20만 원이라는 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서 남은 쌀은 무조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된다, 그 정책은 윤석열 정부 대책은 아닙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쌀값 대책은 수확기 20만 원은 유지하되 수확기가 아닌 시절에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부가 쌀에 대한 거를 20만 원이라는 일종의 고정가격을 가지고 남으면 무조건 사는 그런 비합리적인 정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쌀값을 안정시키는 거하고 비합리적인 가격하고……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고정적으로 20만 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시장경제에도 안 맞잖아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조금 플렉서블하게 변경이 됐다가……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부족하면 정부가 좀 사 가기도 하고……

○윤준병 위원 그러면 쌀값 20만 원 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수확기에는?

○국무총리 한덕수 보장이라는 거는……

○윤준병 위원 아니, 수확기에는 왜 20만 원을 유지해 주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수확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스트도 들고 했으니까 정부로서는……

○윤준병 위원 그래서 20만 원 적정가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 적정가격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추경은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추경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준병 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꼭 뒤따르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추가경정예산은 국채 발행이 뒤따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자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필요할 때는 하겠지요. 그런데 국회에다가 추경을 요청하면 실제 가용재원을 행정부 내부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까? 행정부에서 추경예산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안 담기면 우리 국회는 무조건 국채 발행해서 정부의 빚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준병 위원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그것은 호도가 아니고요. 행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혹시 부족하다면 그런데 추경에 대한……

○윤준병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국회에 정규 본예산의 심의가 요청되면 실제 감액과 증액을 하는데 보통 1% 이내에서 합니다. 그렇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준병 위원 세수결손 10% 정도 났지요? 세수결손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할 거지요? 이루어졌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게 1%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세수결손이라든지 세입이나 지출 구조 관련된 내용이 10%가 변경됐다.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그 변동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추경 형태로 하든 국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시면서,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추경을 하면 국채 발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지금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한

내용 가지고도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이 뒤따랐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면 잘하는 거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국회에 와 가지고, 본예산도 1% 수준을 변동시킬 때 본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데 현재 세수결손이 10% 정도, 본예산의 10% 정도 세수결손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교부세 배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해도 되나요?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출 내용을 가지고 세입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주어진 돈 가지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든 정부가 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의 더 제대로 된 역할 아닐까요?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먼저 앞의 추정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심의권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그다음에 물론 추정을 하면서 가용재원과, 재원에 대해서 국회에 상의를 드릴 수는 있었겠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렇지만 일단……

○윤준병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걸 내가 끝까지 해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볼 때는 현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그대로 나타난 거다.

아니, 10%에 해당하는 변동 요인이 발생했는데 본예산 할 때 1% 조정해도 국회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10%의 변동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거친다 이거는 국회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크게 나가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호황기에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적극재정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 상황이 호황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호황기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호황기가 아니면 당연히 적극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균형 잡힌 그런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거는 기재부장관 주장이고요. 지금 민생 죽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재정 규모 자체는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민생에 대한 지원 부분을 최대한 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의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앞으로 2025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보겠습니다만 정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문제 또 정부의 역할 문제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판단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부의 역할 문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민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오후 질의의 마지막 순서를 이재강 위원께서 하실 차례입니다만 김성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뭐 3분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우리 예결위원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질의기 때문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충실히 답변해야지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광우병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관련이나 아니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예결위원의 그 질의만을 가지고, 답변 없이 질의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그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또 잘못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상황에서라도 국무총리나 부총리에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질의 관례를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나중에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짧게, 이제까지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시간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고려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율의 이재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박정 위원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뉴라이트가 뭐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레프트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재강 위원 큰일입니다.

총리님,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또…… 대통령께는 뉴라이트가 뭔지 알려 드린 적이 없겠네요? 뉴라이트 논란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대통령은 8월 29일 날 기자회견에서 또 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뉴라이트가 뭔지 짝악 나옵니다.

총리님, 대통령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인터넷에 나오는 그 뉴라이트의 개념이 다 맞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친일이다’ 그런 데피니션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게 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국민들도……

○이재강 위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뉴라이트가 뭔지는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강 위원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재강 위원 썩운다고, 강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분들은 이런 이념적인 이슈를 가지고 행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틀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만 보는 것 같습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국가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니 친일 매국행위를 하는 자들이 국가 주요 보직으로 가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총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문구는 어디서 나오는 문구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당연히 저것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일 첫 줄에 쓰인 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기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이재강 위원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게 뉴라이트에 대한 개념인가요?

○이재강 위원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호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망언을 내뱉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친일 매국적인 주장은 팩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의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이런 걸 알 턱이 없겠지요.

또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반헌법적인 친일 매국 뉴라이트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장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날 국정브리핑에서 정부 인사원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입니까?

제 눈에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라를 버리고 일본의 편에 설 사람들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일본에 빌붙어 동포를 죽이고 개인의 잇속만 챙긴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니까 저런 인사들이 충성심이 있다고 속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총리가 바로잡아 줘야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뉴라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뉴레프트도 모릅니다.

○이재강 위원 참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떳떳합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위원장 박정 위성곤 위원님도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위성곤 위원 질의시간이 아니라 저런 답변 태도로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 질의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박정 질의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거니까 위원님은……

○위성곤 위원 국민이 판단하게 회의 진행을 잘하셔야지요.

○이재강 위원 김문수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러면 어디 국적입니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이재강 위원 그러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이 충성해서 지켜야 할 조국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 출전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강 위원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손기정 선수도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이재강 위원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국적이 일본인데 조국도 당연히 일본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본…… 조국을 위해 싸웠던 조선인 독립군들은 반국가세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일본에 싸워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독립운동가이지요.

○이재강 위원 김문수 장관의 말에 의하면 일제 치하 우리 선조의 조국은 일본이 됩니다. 즉 친일파들은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손기정 선수가 친일파입니까?

○이재강 위원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반국가세력이 됩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뉴라이트들은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은 인천 모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국가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임시정부입니다.

○이재강 위원 PPT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알지요.

○이재강 위원 못 읽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닙니다.

○이재강 위원 노동부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노동자들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들입니까? 대답……

아니,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재강 위원 그럼요, 지금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사도광산 부분은 그건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장관은 지금 사도광산에,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들을 일본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전부 밝혀 내야 되는데……

○이재강 위원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님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지요.

○**이재강 위원**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강 위원**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공부 좀 하세요. 국적법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자의 시간에 갑자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시간을 얻고 말씀하셔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늘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을 속여 국가기관의 장으로 취임하여 기관이 능히 해야 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고 이는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국회에 침입을 하려다가 그 주동자로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이 대한민국 노동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 어떤 친일행위를 벌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말씀을 삼가십시오.

○**이재강 위원** 잘못된 친일 역사관으로 헌법정신을 모욕한 김문수 씨를 대한민국 노동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시기를 권하고요. 내려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예결위에서 질문할 사항입니까?

○**이재강 위원** 예결위에서 질문할 사항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잘못 되었으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질문이지요.

○**강승규 위원** 이게 무슨 철학이에요?

○**위원장 박정** 위원 간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정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재강 위원** 외교부장관, 조태열 장관님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차관입니다.

○**이재강 위원** 대통령실 김태효 안보실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들었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런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김영재 대사도 저희 방에 와서 보고를 해서 마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서로 협상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일본하고 김영재 대사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발 서로 국내 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에 가서 과잉 홍보를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자국에 가서 홍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은폐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래서 등재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등재 사실이 알려지면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반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일본을 지켜 주고 싶었던 겁니까? 김태효 실장이나 외교부나 모두 한통속입니다. 사용하는 단어까지 비슷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사도광산에 다녀왔습니다. 사도광산에 가면서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된 일본 산업정보센터도 갔다 왔습니다. 군함도 가니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강제성도 적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명 이상 가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회의원이 가서 보니까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관람 온 일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글들을 일본 말로 적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번역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 그래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하신 분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통탄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전시물 어디에,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광산에도 그렇고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강 위원 등재되었다 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재강 위원 없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용했다고 추정하는 나무도시락 하나가,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관도 유네스코 등재된 사도광산 범위에서 2km 벗어난 지역의 향토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가 보니까 3층인데 1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2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3층 제일 구석 6평 남짓한 곳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 당시에 6평 거기에 전시된 것 보니까 임금과 담배를 지급한 것으로 징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자가 일하던 갯도는 공사 중이라고 방문도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 볼 수 있는 갯도는 조선인 노동자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줬는데, 이제 이것 돌이킬 수도 없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홍보 수단으로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관광객 유치하고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일하고 죽어 갔던 잔혹한 역사의 현장이 가해자에 의해 은폐되고 일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동조해 줬습니다. 조상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후손들이, 그것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참하고

일본 국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일장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 정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직자도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또한 국헌문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예산 3208억 원, 2022년에 251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5744억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5744억 원, 언론이 정부 부처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은 추정치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죄송합니다. 그 5744억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혹시 허용해 주신다면 외교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180개국에 대한 전면적인 외교전을 했습니다.

○이재강 위원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거의 100번 가까운 그런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이재강 위원 예산을 엉터리로 썼으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도 해외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지금 썼다는 것은 아마……

○이재강 위원 5744억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ODA를 그런 국가들하고……

○이재강 위원 저는 ODA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 보십시오.

저는 실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사용한 예산을 모두 더한다면 이를 훨씬 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아직도 엑스포 유치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엑스포 유치에 쓰인 정부 총예산과 그 사용처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첫째로 엑스포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전연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나라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경쟁국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강 위원 20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의 규모와 상세 내역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는 그런 일종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예산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 규모와 상세 내역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ODA 예산……

○이재강 위원 ODA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에요, ODA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재강 위원 총리님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하고……

○이재강 위원 지금 나라 개수, 개도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 사업을 하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정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재강 위원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예산은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 놓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한덕수 진정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재강 위원 호주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투표에서 한국이 받은 표는 몇 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29표입니다.

○이재강 위원 사우디아라비아는 몇 표를 얻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전체적으로 한 140표쯤……

○이재강 위원 119표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29표를 얻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5744억이 맞다면 1표당 198억짜리 예산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큰 잘못이고요. 저희는 180개 국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민관, 언론, 전부 다 총력전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재강 위원 총력전을 했는데 총력전을 해서 결과가 29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표당 198억짜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물론 엑스포 유치라는 결과를 못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외교적인 자산을 축적했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잘못된 외교 참사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이것은 우리 ODA 예산을 쓴 겁니다, ODA.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강 위원 세부내역을 소상히 밝혀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 엑스포만을 위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재강 위원 엑스포만을 위해 쓴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내가 다음에 또 ODA까지

문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ODA 그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이재강 위원 ODA 포함한 예산이 아닌가?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재강 위원 제 담당이, 소상히 잘 모른다고……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엑스포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ODA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재강 위원 ODA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포함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ODA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들과 포함됐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강 위원 실패한 부산엑스포 외교 참사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소상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마치 엑스포만을 위해서 별도 무슨 예산을 해 가지고 뭘 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강 위원 다음 기회에 제대로 한번 문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이재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자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데 중간에서 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충분하게…… 질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저 질의 방식이 잘못됐다 또는 잘됐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국무위원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스스로 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틀리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ODA에 대해서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통해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과 결산에 관계된 것이고 특히 결산에 대한 심사인데 우리가 4일에 걸쳐서 질의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종합정책질의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고 결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잘됐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정책질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춘천·철원·화천·양구읍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약 40년 동안 하고 현재 국회에 와서 4선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제주도는 항공기로 갈 수 있고 배로 갈 수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북쪽으로 항공기로도 갈 수 없고 지상으로도 갈 수 없고 지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이 지역의 특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군인들이 아주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얘기를 먼저 좀 해 보겠습니다.

전투력이라는 것은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의 합이라고 합니다. 유형전력은 바로 무력, 무기의 성능과 무기의 양입니다. 그러나 무형전력은 가장 근본이 사기와 군기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기와 군기를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하급자들이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을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고 하지요.

우리 군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기 국무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전투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의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는 국무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은 지금 병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동욕자승이라고 했는데 간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사 소위 중위 중사 상사 이와 같은 초급 간부들에게, 충분히 그들이 사기를 유지하고 군기를 갖추고 부하를 지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부서관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영관장교와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병사 봉급을 얼마를 줍니까? 205만 원 준다고 하지요. 하사 봉급은 얼마입니까? 그들 봉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205만 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4대 보험을 떼고 연금에 대한 기여금 내고 이것까지 다 하고 하면 205만 원이 안 됩니다. 소위는 어떻습니까? 소위도 하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병사들의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봉급 통장을 샘플로 뽑아 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소위 거고 이것은 하사 겁니다. 그런데 205만 원이 안 됩니다.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기재부장관님, 이래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한기호 위원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초급 간부 근무여건을 위해서 정부도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복무장려금 외 당직비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1인 1실 간부 숙소 확충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위관급 장교하고 부사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할 계획이고요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비무장지대 안에서, 전방 GP에서 근무하는 소위·중위와 중사급 부사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24시간, 단 하루도 밖에 나올 수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얼마를 줍니까? 낮에 자든 밤에 자든 8시간은 잔다고 빼면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8시간은 근무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8시간을 30일 동안 근무하면 $3 \times 8 = 24$, 시간외수당 240시간분을 줘야 돼요.

기재부장관님, 주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100시간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안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휴전선을 똑바로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안 줍니까?

또 병사들에게는 내일준비금이라고 내년도에 55만 원을 줍니다. 하사, 소위, 중위, 중사, 사관생도, 후보생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까? 내일이 없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왜 안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자꾸만 초급 간부하고 병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병사는 내일이 있고 간부들은 내일이 없습니까? 예?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이 저한테 자기 봉급 통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전투력이 유지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여러 가지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의 생각과 철학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경제부총리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좀 설명을 들어 보시지요.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것 한번 또 볼까요.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전방 GP 안에서 근무하는 초급 장교와 초급 부사관, 이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지요. 그 밥값을 세끼분을 다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잘 싸우길 바랍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뭐니까?

GOP 철책에서 낮도 없고 밤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나갑니다. 그러면 20일 동안은 근무한다고 칩시다, 열흘 빼고. 그들도 낮에 자든 밤에 자든 8시간은 잔다고 치면 8시간분 20일은 줘야지요. $2 \times 8 = 16$, 16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줘야 됩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주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인지하고 있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간부들 급식비 지원 문제는 원래 간부들한테는 영외급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것보다 초과되는 비용의 급식비가 나오는 게 현실이고 사실 현재는 그 초과되는 비용은 저희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급식을 위해서 개인이 돈을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부 급식비 자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애초에 소요되는 것들을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옆에 행안부장관님 계시는데, 경찰들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지요? 그래서 2023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찍 동이 나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은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인은 안 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위원이 여당 위원이야, 야당 위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군 출신의 한 사람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전방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못 싸웁니다.

그러고서 항상 뭐라고 그러나 하면, 제가 행안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과 고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똑같습니까? 군인은 입고 있는 옷이 수의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총리님이나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국무위원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부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지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부사관도 우리 모집인원에 모자랍니다. 70%밖에 안 돼요. 장교도 모집인원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이상 10년 사이 중기 복무한 간부들이 전역을 합니다, 나 더 이상 군대 생활 못 하겠어.

차관님, 2023년도에 중기 복무자가 몇 명 전역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이천 한 사백 명 정도 전역을 희망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군이 전투력을 유지합니까, 군대생활 못 하겠다고 간부들이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왜 자꾸 눈을 감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들도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국가의 안보를 지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지원을 안 하니까 이들에게 금년도까지 군 복무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면 수당을 줍니다. 차관님, 얼마 주지요, 금년도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한기호 위원** 아니, 장려수당 주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장교들은 1200만 원을 주고 부사관들은 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약 10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생도들이 뭐라고 하나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들이 단기 복무자로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주는 거야, 장려수당을. 너 지원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들이 다시 군 복무하는 동안에 장기 복무 신청을 합니다.

장기 복무자가 그중에서도 나오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장기 복무가 되면 1000만 원 받은 것 반납합니까? 반납 안 하지요. 그러니까 사관생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왜 안 주고, 그들은 줬다가 반납 안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수와 수당과 이 체계가, 국방이 지금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검토가 돼서 그들에게 정말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람되다고 느끼도록 못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부대를 많이 없앴습니다. 많이 없애면서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ROTC는 28개월 합니다. ‘우리도 줄여 줘라. 병사는 18개월 하는데 왜 우리는 열 달 넘겨 하느냐, 같은 단기 복무인데?’……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각 대학교 ROTC 기준이 과거에는 2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명입니다. 20명이 안 차는 ROTC단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선배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히 듣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제 군이 무너져 갑니다.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북한이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하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이 저희 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이 아니고 좀 정정할 것은 병 봉급이 지금 부사관하고 역전됐다라는 것은 사실 좀……

○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봉급 통장에 찍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사들은 205만 원을 25년도에 받게 될 것이고요. 동일한 수준의 하사 1호봉은 아마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수당을 했을 때 최저 252만 원 또 특수한 근무수당 해서 특별추가수당을 받는데 많이 받는 인원은 한 29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 봉급을 올렸기 때문에 간부하고 봉급이 역전됐다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게 좀 다른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좀 긴축되는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지금 현재 연평균 매해 국가재정 증가분에서 우리 국방비는 그것을 상회하는 퍼센트를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그 예산들을 국방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사들, 아까 중견 간부들이 전역하는 문제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 2000여 명이 전역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봉급적이나 경제적 문제로 전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있는 직업의 안정성 문제 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봉급적,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접근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면서 마지막에 표현하셨던 ‘이렇게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에는 사실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장병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마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장병들의 사기, 군기, 전투력 지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서 보상해 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도 거기 앉으셔서 그런 얘기도 안 하신다면 국무위원 중의 한 분이 아니지요, 물론 오늘 차관님이시지만.

제가 하사 봉급을,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하사 봉급 244만 5590원—이것은 특정인의 봉급 명세서입니다—그런데 공제금액이 48만 3700원 그래서 실수령액 통장에 찍힌 게 196만 1890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병사들한테는 세금 뺐니까? 안 빼잖아요. 자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군의 초급 간부들이 더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도 군생활 다 하셨는데, 물론 국가의 경영하는 쪽에 서다 보니까 그러시겠지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간부들에게 지금 해 주는 것 중에 병사들에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잘 아시겠지만 다 귀한 집 아들이 병으로 와 있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맨입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 굵은 일들을 전부 다 초급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듣는 애기입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예결위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5년 임기의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 다양한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는 국민의 삶을 삼중고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소수의 특권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 미명하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세수결손이 56조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23조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 가난해진 나라 곳간을 메우고자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소수 특권의 지갑을 불리는 일과 맞바꾼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소수의 특권을 위해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돈이 말라 버리는 건전재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운용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위기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 3050클럽 가입, 코스피 3000 시대 개막 등 객관적 지표는 문재인 정부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 53조 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식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감사합니다.

○문금주 위원 오늘 계속되는 내용 중에 총리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또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서서는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 등용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한마디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이것은 학자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뭐 정부나 공적 조직과 연관돼서 얘기할 그러한 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총리님, 이게 일반 장터 바닥에서 개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모르겠으되 어찌 됐든 국무위원 또 정부 주요 인사로 그런 분들이 등용되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정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한 판단은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념에 기초를 둔 그러한 평가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적들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분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국무위원이 됐어요. 아울러 또 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논쟁이 있어서 답변을 안 하겠다는 인사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대통령 또 우리 총리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 뉴라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미몽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우리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모른다고 또 모른 척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피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0년 강제로 체결

된 한일합병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 65년 8월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보면 65년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병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던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 국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과 18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피해자들을 합법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봤습니다. 우리 법원에서조차도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닌 점을 밝힌 겁니다.

총리님, 최소 총리께서는 일본강점기 일본 국적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에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 국민은 무력 통치에 따라 노예와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라도 과거 국회가 주장한 것같이 강제로 맺어진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를 주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위원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런 해괴망측한, 일본강점기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무위원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을 또 총리님께서 제청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논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왔지만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논거를 대셨어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부분, 일단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다른 노력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을 주는 것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못된 논리이고 나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교부단체들 있지요, 서울을 비롯해서 소위 잘나가는 수도권의 몇몇 단체들, 지자체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자체 세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은 지금 지방소멸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지요.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의 저출산에 대한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다, 그로 인한 경쟁 압박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결혼해서도 교육비랄지 주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애 낳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총리님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도 공감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이나 지방소멸의 문제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지방교부세…… 오히려 우리 정부가 지방을 키우려면 지방재정, 자주 분권을, 재정 분권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행안부차관님, 안 계시는데……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세수결손 난 것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처리한 것을 지금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한 거라고……

○문금주 위원 그 근거는 어떤 규정을 따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가재정법 43조 5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국가재정법 43조는 자금 배정 시기를 기재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교부하지 않도록, 불용 처리하도록 하는 권한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한테 선택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국세, 그러니까 세수결손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방교부금을, 교부세나 교부금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세수결손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는 시점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24년이나 25년……

○문금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공문으로 시행을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문금주 위원 그것을 왜 당시에, 작년에 9월 며칠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 그것은 아까 행안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행안부하고 교육부에 디브레인이라 그래 가지고 공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요.

○문금주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5조 2항은 어떤 규정입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된다. 앞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산 조항이지요? 그게 정산 조항이지요, 5조는? 정산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문금주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 보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3년도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24년이나 25년에 정산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년도나 24년도에 정산을 하면, 특히 25년도에 만약 예산 정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11조를 지방교부세를 그때 가서 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불용 처리를 해 버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국세가, 국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부세나 교부금은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5년도에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재정절벽, 11조가 갑자기 깎이는 그런 애로사항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에 지방재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23년도에 저희가 세수 상황도 봐 가지고 그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판단을 당시에 한 것입니다.

○문금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들어간 걸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 부분은 쟁의심판, 현재의 판결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지금 세입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로 지자체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까, 불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올해는 아직 저희가 재추계 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판단은 현재의 심판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문금주 위원 제가 불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불용이 역대 최고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수결손 때문입니다.

○문금주 위원 세수결손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편한, 쉬운 방법이 지자체 손목 비트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것보다는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세수결손이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해 주신 지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정부지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지출 사정을 봐서 저희가……

○문금주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은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역대 최고의 불용을 남기는 겁니까? 그리고 보통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들, 각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기재부 부총리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문금주 위원 아니,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보통 국가재정법 4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각 부처의 예산집행 심의회를 열어서 불용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집행 상황도 점검하여서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처가 많더라고요. 이 개최 실적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러한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안 보이니 외부에서는 의도적 불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용 최소화의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에 많이 다니거든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다 사장님들 친하고 한테 너무 죄송해 가지고…… 당연히 지역에서 많이 다니기는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힘드신 게 그냥 눈으로 보여서.

식당 말고 모든 다른 자영업들도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그나마 코로나 과정 속에서 온라인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됐었고 했는데 티맵 사태 때문에 온라인 유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

우시지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경제가 좋다, 경기가 좋다, 희망이 있다, 살 만하다, 이렇게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국민들 단 한 명도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만난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시고 기관장들이시니까 그 생각에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더 크게 도약할 겁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집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의 민생 쪽에 완전히 온기가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경제를 평가하는 이러한 중요한 분야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어떤 지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실 경제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물론이지요.

○장철민 위원 어떤 근거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가 넘칩니다.

○장철민 위원 다섯 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첫째, 성장률입니다. 1.4%에서 올해는 2.5 내지 2.4로 가능합니다.

○장철민 위원 성장률 그러면 말씀 중에……

○국무총리 한덕수 두 번째, 국제수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외환 부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2년에……

○장철민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죄송합니다. 그 이상은 줄일 수가 없겠네요. 2022년에 에너지값 때문에 총 771억 불 무역수지가……

○장철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 경성률부터 조금 얘기를 해 보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무역수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십여 개월째 흑자입니다.

○장철민 위원 총리님, 일단은 제 질의시간이니까 저의 질의를 존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저 아무것도 지금 설명 못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제가 계속 여쭙볼게요.

성장률이 상반기에 2.8% 정도였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전년도……

○장철민 위원 지금 하반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1년 전체로 보면……

○장철민 위원 지금 하반기 얼마 예상하십니까? 한국은행이든 KDI든 기재부에서 자체 지금 경제성장률 예상하시는 거든 상반기가 2.8%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1년 전체로는 2.5~2.6 정도……

- 장철민 위원 그래서 하반기는 2.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어쨌든……
- 장철민 위원 아니, 상반기가 2.8%였고 하반기 2.0% 예측되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천만에요. 그게 바로……
-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 국무총리 한덕수 그게 바로 미국보다……
- 장철민 위원 총리님!
- 국무총리 한덕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장률입니다.
- 장철민 위원 총리님, 내년도 경제성장률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글썽요, 한 2.2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장철민 위원 아니, 예산안 제출하실 때 경제성장률 시뮬레이션해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장철민 위원 예, 경제부총리 답변하시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1% 정도로 저희 전망합니다.
- 장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KDI나 한국은행이나 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거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 국무총리 한덕수 하향 조정이라는 게……
- 장철민 위원 0.1% 정도 하향 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여쭙보는 거예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아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수출은 상반기에 수출 기여도가 높고요. 하반기로 가서 내수 기여도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나, 국내 민간의 내수 하신 분들의 어려움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도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곳은 수출 쪽입니다. 상반기에 2.8%……
- 장철민 위원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일정 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올해보다 나은……
- 장철민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한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전 세계에서……
- 장철민 위원 올해 성장률 대비 내년 성장률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천만에요.
- 장철민 위원 아이, 제 질문이 뭐가 ‘천만’ 하십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전 세계에서 선방하고 있잖아요.
- 장철민 위원 아니, 올해 성장률과 내년도 성장률을 비교해서 말씀 주시라고 하는 게 뭐가 ‘천만’ 하십니까?
-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딴 나라는 더 낮잖아요. 딴 나라는 더 낮잖아요.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저는 딱 이 한마디를 여쭙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너무 단순하게……

○장철민 위원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데……

○국무총리 한덕수 국제수지 흑자를 보세요. 2022년에 이천이백……

○장철민 위원 이런 현실 인식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무총리 한덕수 천만에요!

○장철민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거는 위원님처럼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

○장철민 위원 이게 왜 잘못 해석하는 거지요? 경제성장률이 안 좋아진다, 그거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성장률 전망치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성장률 그 기준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기보다 일부, 정말로 극히 일부 수출에서 약간의 회복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철민 위원 수출에서 약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성장, 고용 그리고 국제수지 그리고……

○장철민 위원 바로 그 고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바꾼 것 아닙니까, 고용이 더 악화될 거라고?

○국무총리 한덕수 전망치요?

○장철민 위원 그것은 정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그냥 입장이 다른 거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전년 동기비 30만 명씩 늘어나던 것이 20만에서 15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총리님과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께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시는 거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도 국제적으로 경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장, 국제수지, 고용, 물가안정 이러면 그것이 경제가 잘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잘되는 겁니까? 물론 민생 중요합니다. 민생회복 더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시고 계시는……

○장철민 위원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장철민 위원 총리님께서 사실 그렇게 곡해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요.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께서 곡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싶은데……

○장철민 위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천만에요. 많은 국민들이……

○장철민 위원 정말로 국민들께서 ‘천만’ 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만만’ 하시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많은 국민들이 국제수지가 전해보다 전전해보다 선방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거는 국제수지, 수출……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세계 경제기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위원님만 달리 보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장철민 위원 저만 달리 보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정말 잘못 보고……

○장철민 위원 저만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KDI와 한국은행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한국은행과 KDI가 어디 경제를 잘못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아니 현재……

○장철민 위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올해 KDI가……

○장철민 위원 실제로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제출을 하셨어요.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2.2%가……

○장철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쭙어보는 거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가 지금 옛날의 70년대 성장이 아니잖아요?

○장철민 위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이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철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식을 지금 국무총리님과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동의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한덕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께서……

천만에요……

○장철민 위원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원하시는 것 아니시지요?

○장철민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무총리 한덕수 원하시는 것 아니시지요?

○장철민 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가 수출이든 일부 지표에서 정말로 지옥의 터널을 일부 벗어난 것 같다. 그래도 희망의, 뭔가 바닥을 지났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내수는

너무나 어렵고, 모든 민생 분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장철민 위원 저희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철민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국민들께서 너무나 어려우신데 그냥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도약할 거다’라고 근거 없이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신뢰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도약한다고 하면……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내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얘기를 해 보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도약한다고 하면 실망하는 겁니까? 아니……

○장철민 위원 도약의 근거가 있어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세계의 모든 전문기관들이 경제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재정이 건전하다, 국제수지가 흑자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다……

○장철민 위원 세계의 그 모든 전문기관의 모든 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만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장철민 위원 총리님께서 확인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하신 그 모든 자료들 다 제출하여 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어떤 보고서에서도 사실 제대로 못 봤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보고서를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장철민 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도약할 거다라는 보고서요.

○국무총리 한덕수 올해 KDI가 경상수지 흑자를 770억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어떻게 경기를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우리 경제를 물어보는 게 됩니까?

○장철민 위원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성장 고용 국제수지 물가 이것 외에 뭘 보자는 겁니까?

○장철민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구체적인 지표는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매판매 관련된 부분이 내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장철민 위원 소비재 판매 관련해서 지금 사실 15년 만에 가장 최악의 낙폭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현재요.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소매판매가 좋지 않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수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핵심 지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최근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소매판매가 그렇고요. 제가 그 외에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같이 봐야 되는……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내수가 올해 한 해만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소매판매액지수 같은 경우에도 15개월인가요, 지금 연속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그래서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수 판매 진작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주문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효과가 없는 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게 소매판매의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22년 23년도는 저희가 복합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상황을 벗어났고요. 수출부터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장철민 위원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소매판매도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장철민 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직접 같이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 다섯 차례가 넘는데 그러면 지금쯤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 어떤 정책 패키지들이 실제 내수 판매를 포함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인정하시겠지요? 그래서 일단 물가……

○장철민 위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책 패키지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어, 물어보는……

○장철민 위원 제 질문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일단은 물가가 안정 기조로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안정 기조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내수와 관련된 것들은 국회에 사실은 내수와 관련된 그런 입법도 냈었는데 21대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행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장철민 위원 좀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희가 내수 소비재와 관련된, 만약에 중고차……

○장철민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로 효과가 검증돼 있는 정책 패키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께서 내수 진작을 할 거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여쭙보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금 정리된 내수 진작 정책 패키지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난번에 저희가 내수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가 소비 공제라는, 전통시장 공제와 같이 이런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내수 활성화 입법을 재입법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과거

보다 15조 원 더 추가적으로 투융자를 하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까지, 그런 대책들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별로 국민들께서 확 이해가 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내수 활성화에……

○**장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추가, 다른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결산 관련해서 여러 보고서들을 보다가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작년에 발간했던 이런 유의미한 보고서가 있기에 정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다른, 박수민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질의한 내용에 부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이런 경기 변동보다 실제로는 조세 부분에서의 변동 폭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부 동의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OECD 국가 전체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체가 실제로 경기 등락에 따른 조세 규모의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산업구조 측면이 아니고 법인세 비중이 늘어나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은 공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자체가 변동이 심한데 산업화되는 측면도 같이 우리가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실제로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국민들께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는 제가 대학을 제일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교과서를 배울 때 균형재정 함정이라든지 경기동행적 재정 운용의 위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확대하고 경기 하강기에 재정을 긴축했을 때 오히려 재정이 경기를 더 위축시키거나 더 과열시킬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즘에 조세부양성, 그러니까 이런 경제 등락에 따른 조세의 변동 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배웠던 것보다 재정의 이런 어떤 경기를 더 과열시키고 더 어려울 때는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동의하시기는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장철민 위원**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비비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원래보다 세수가, 작년처럼 엄청난 결손이 아니라 그전처럼 과다하게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다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니 데이 펀드(rainy-day fund)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불황 대응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조세 부분의 급등락에 대해서 대비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세수결손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횡재 같은 과다 세수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 고민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고민……

○장철민 위원 저는 사실은 올해 국회 결산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재정 운용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해서 더 경기를 위축시킨 그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세부양성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경기 등락에 따른 훨씬 더 조세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어떤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모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소위와 이후의 과정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조사관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민할지 논의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세수결손을 봤는데 그게 감액 추경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이 됐든 그 어떤 논의도 국회에서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출 조정을 함으로써 완전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서 이게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에서 편성하는 게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논의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예산을 어떻게 쓰든 어떤 방식으로 쓰든 어떻게 집행하든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국가재정법 몇 조 위반, 몇 조 위반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의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국회와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있게, 그래서 지금의 국민적인 어려움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건어차 버렸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국민들의 어려움, 지금의 예산상의 문제, 지금의 결산상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계속 국회 과정을 회피하시면 그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계속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록 녹화중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송이 됐을 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꼭 발언시간 내에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위원장이 앞서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격한 감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답함으로써 장내 소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 본인이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더 상세한 대답을 위해서 다른 국무위원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이—오늘이 종합정책질의입니다—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시면서 장내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과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곽규택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위원님들께도 늦은 시간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역시 감사원장님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앞서 동료 위원님들 중에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국무총리님께서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면서 말씀을 차분하게 못 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특활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 총리님께 내년 예산의 기초라든지 내년 경제전망 또 국민이 느끼시는 내수 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답변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삼사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예.

○곽규택 위원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곽규택 위원 경찰청장님이 여기에 행정안전부장관님하고 함께 나와 계시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경찰은 경찰예산을 경찰청에서 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부분은 검찰하고 법무부하고의 관계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경찰이 지금 상당히 큰 액수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2018년도 경찰의 특활비와 내년도 경찰의 특활비가 약 700억을 넘으면서 감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늘었던 것 같은데 수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18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거는 분명합니다.

○곽규택 위원 2018년도에는 금액이 어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2018년도에는 일반예산이 한 108억 정도……

○곽규택 위원 특활비만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특활비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정보예산을 따로 쓰기 때문에 정보예산이 약 832억 해서 총액 940억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은 31억 7000으로 줄었고 정보예산은 705억 원으로 줄어서 총액은 737억이어서 결국 18년과 비교하면 약 2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900억대에서 한 700억대가 된 거네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곽규택 위원 2018년도에, 같은 기간입니다. 2018년도 검찰의 특활비 그리고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 액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2017년에 179억이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179억.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리고 작년에는 72억이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72억. 그러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 귀를 의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사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경찰에서 쓰시는 특활비 그것이 저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치안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비하면 또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특활비는 비단 수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치안 이런 데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한 특활비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29억 2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곽규택 위원** 그래서 수사에는 당연히 보이스포싱 수사라든지 마약수사라든지 다단계 수사라든지 그런 대규모 수사를 할 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검거 인력이라든지 압수수색 또 정보원의 활용 이런 부분에 당연히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특활비의 용도라든지 사용처를 밝힌다는 것은 특활비의 원래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것이겠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은 틀린 것 같고요. 수사 활동을 위해서 그런 특활비가 적절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건 맞겠지만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조금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정리된 것이 있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우선 우리 정부가 정부를 인수받아서 시작을 할 때의 그 여건을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국제교역이 침체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비판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고 성장률이 저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정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90년대 말에 경제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에 국제경제의 위기에 따라서 오랫동안, 코로나 위기를 겪을 때까지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부진한 경제를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의 과제였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뀌고 또 개혁되어야 하는 분야를 제대로 개혁을 해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되겠다. 크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는 2021년에 미국의 경우에 기준금리가 거의 10배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2.5배 올랐고 또 물가는 저희가 2022년에 정권을 인수하는 4월 달에 4.8%, 5월 달에 5.3%, 6월 달에 6%, 7월 달에 6.3%로 피크를 치고 지금 물가는 약 2.6%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의 근원물가는 2.2%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물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

물론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아직도 가격이 들락날락하고 또 유가에 대해서도 아직도 완벽하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은 그런 와중에도 11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무역수지는 2022년, 2023년에 정말 고된 고난을 겪었지만 작년도 6월부터는 계속 흑자로 전환해서 15개월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국제 모든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런 평가는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습니다. 따라서 성장,

재정의 건전성, 수출, 국제수지, 물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수가 아직 이런 높은 금리, 이런 대외적·대내적인 상황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가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성장과 재정의 건전성과 수출과 국제수지와 물가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수를 좀 더 촉진하고 우리 민생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의료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최근에 월드뱅크가 평가했던 성장의 또 세계 발전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서 우리나라가 물가나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가장 빨리 극복하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우리 민생과 내수 그리고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 여기에 지금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분 부분 분명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우리 경제가 1년, 2년 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어렵다. 문제다. 회복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도 아니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 정부, 언론, 우리 국민들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경제회복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정말 노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택 위원**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감사합니다.

○**박규택 위원** 제 질문시간 중 한 절반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수도권·기득권 중심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막고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요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박규택 위원** 지난 2020년 11월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합병 취지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 도약 그리고 양사 통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등 소비자 편의 향상, LCC 3사 단계적 통합으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항공사 합병 취지가 하나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항공사 합병을 추진하면서 기업결합 조건으로 운수권과 슬롯이 해외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운수권과 슬롯은 소중한 국가의 자산임에도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 슬롯을 다른 나라에 내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을 내어 주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두 항공사 합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가 자산을 내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초대형 항공사 도약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운수권과 슬롯을 해외에 넘겨주는 것 외에도 유럽·미주 노선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에게 운수권, 슬롯을 넘겨주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행기와 인력까지 모든 것을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티웨이 또는 에어프레미아 같은 곳의 장거리 노선 운항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최근 티웨이항공이 각종 결함으로 장시간 지연되어 승객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함과 장시간 지연 운영이 정부의 무리한 항공사 합병 추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정부가 했는데 피해는 오로지 승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사 합병을 발표하면서 LCC 3사를 통합하여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을 하고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22년 3월 국토부 항공실장과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에게 ‘LCC 통합본사가 생긴다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를 보더라도 부울경이 가장 많지 않느냐,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합병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에서 이제는 ‘민간기업 본사 소재지에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장관은 아니셨지만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항공사 합병에 대한 비난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민을 기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근본적으로 위원님 걱정 사항은 이해는 하지만 기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국적사의 합병을 결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EU와 미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EU는 예비심사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묶여서 지금 같이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 원하는 에어부산을 그냥 가덕도신공항에 남겨라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해외 합병심사를 방해할,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 과정 마치고 나서……

○**박규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덕도신공항이라는……

○**박규택 위원** 잠시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큰 공항을 만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공항을 만들었을 때 그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기반을 둔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 걱정하시는 부분은 합병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박규택 위원** 기업결합에서 승인 국가의 재심사를 우려하시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했을 때 그때 기존 기업결합 승인 국가에서 재심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그쪽의 지시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이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꾸는 것하고는 법률적으로 많이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오히려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완화하는 조치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해외 경쟁 당국의 재심사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확인한 M&A 전문 법무법인으로부터도 동일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어부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매각을 결정하면서 유독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는 부정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박규택 위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항공사 합병 취지는 이미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독점에 따른 요금 인상,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합병 이후에 우려되는 문제점과는 별개로 지난 정부의 항공사 합병 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국토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희 상당히 기간이, 기업결합 자체가 사실 외국의 많은 경쟁국 결합 심사가 진행이 돼야 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단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박규택 위원** 합병 당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광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허종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밤이 늦어 가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요즘 서민들, 중소 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분도 참 많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랫목은 모르겠는데 윗목은 아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을 가 보면 또 골목골목 상권을 가 보면 식당, 커피숍 또 맥줏집, 문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공단에 가 보면 중소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는 또 유례없는 폭염이 왔습니다. 이 폭염이 지나면서 농산물이 많이 타 죽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와야 될 야채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집마다 올해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서 이번 달에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분들이 벌써 많습니다. 정부가 꼭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폭염이 너무 오래 갔잖아요. 총리님, 그렇지요? 정부가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정부는 추석 물가 관련 회의를 했고 시장 점검을 하는 걸 봤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허종식 위원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허종식 위원 늦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서민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고자 합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것 한번 보시면 오늘 낮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인천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저기에 저런 게 보였습니다, ‘시금치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금치가 많이 비쌉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허종식 위원 다음 것 한번 보시면, 시금치 한 단에 마트에서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당연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추석 물가를 앞두고 제가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 신기시장하고—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동구 현대시장의 물가를 오늘 조사한 겁니다. 시금치 한 단 1만 2000~1만 5000원,

쪽과 한 단 1만 2000원, 알배기 배추 5000원, 열무 1만 2000원, 대파 한 단에 6000원, 상추 한 근 6000~7000원, 적색 상추는 7000원, 열갈이배추 한 단 8000원, 오이 1개가 1500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비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폭염이 오면 농산물이 타 죽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허종식 위원 대책을 좀 빨리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날씨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노지에서 하는,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호냉성 작물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저온성 작물이라 사실은 예전에는 여름에 드시지 않았거든요, 노지에서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하는데 이번에는 폭염 기간이 워낙 길어서 지금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 가기 참 겁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허종식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부터는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락시장 점검도 하고 왔거든요.

○허종식 위원 저도 낮에 갔다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좀 팬찮아질 겁니다.

○허종식 위원 주부님들도 저 가격이면 시장 가기가 무서운데, 저런 걸 사서 식당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동네에 있는 식당 여러 군데를 정말 IMF 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것은 인천 주안8동에 있는 ‘묵은지삼겹살’이라는 동네 맛집입니다. 부부가 2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정도였었는데, 제가 1억, 1억 잘못……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순이익이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만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500만 원, 은행융자 1000만 원을 받아서 월 67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고 8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작년 순수익 3000만 원은 이자하고 월세 내면 대략 맞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고개를 끄덕임)

○허종식 위원 저게 실제 제가 다 물어보고 저희들이 적은 겁니다.

다른 것 넘겨 보세요.

이곳은 ‘호프광장’이라고 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곳인데 대략 60명에서 70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좀 큰 호프광장입니다.

은행용자는 7000만 원이고요 이자 31만 원씩 내고 있는데 월세가 310만 원입니다, 대단히 큰 호프광장이니까.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연간 8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가 돼서, 작년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2600만 원입니다.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억 8000만 원의 연간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건 화원입니다. 꽃집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9000만 원은 집하고 같이 얻었는데 실제 이 화원을 움직이는 것만 계산을 하면 연간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가 27만 원이고요 월세가 80만 원인데,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1억 2000만 원인데 작년에 70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 순이익이 2100만 원입니다. 꽃집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인천시 도화동 제일시장 옆에 있는 꽃집입니다.

이분은, 동구 송림동에 있는 ‘금산웃닭’이라는 아주 오래된 맛집입니다. 이분은 혼자 죽장사를 해 왔는데 소상공인정책자금 500만 원 받았고요, 코로나 때 어려워서.

이자가 저기도 10만 원 내고 있고 월세가 100만 원인데, 매출을 계산했는데 작년 순이익이 350만 원, 코로나 전에는 연간 매출이 3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산웃닭은 ‘뭐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묵은지삼겹살은 ‘연체자라 세금 체납자 대출 연장이 불가하니 정부에서 대안을 세워 달라’.

장사가 힘들어서 국세나 지방세를 못 냈는데 그걸 못 냈다고 대출 연장을 안 해 줍니다. 신규 대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장사가 잘됐는데 세금 안 냈으면 그 부분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장사가 안 돼서 못 냈는데 그것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연장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저 집은 하도 손해가 나니까 전기요금…… 중기장관님,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원을. 매출에 따라 전기요금을 좀 차등 감면해 달라, 그거라도. 장관님, 6000만 원으로 올린 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종식 위원 그런데도 위낙 힘이 드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최근에 1억 400만 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허종식 위원 예.

그리고 이분은 ‘e음카드, 지역화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온누리상품권은 실제로 현장에서 깡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 지역화폐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부의 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입니다.

여러분, 저것 잘 보시면 금융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대 5년, 지역신보 대출 최대 5년 연장 또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배달료·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추가 정책자금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싸늘할까요,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고금리,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서 현장이 어렵다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자 이자가 너무 높고 월세 감당을 못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데 7·3 대책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저런 용자의 부분을 상환 연장하는 부분들입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장에서의 온도차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계속 체크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책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못 갚은 돈이 올해 1분기만 10조 8000억이라는 거잖아요. 작년 4분기에는 8조 4000억. 그래서 1분기 사이에 2조 4000억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에 1.30%에서 올해 1.66%로 11년 만에 최고지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 폐업 1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91만 명이 폐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100만을 넘어갔지요,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상반기까지 한 51만 명 정도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종식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자 1100만에서 100만이 폐업하면 열 집 중 한 명은 폐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무려 4조 원을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50%인 2조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정부가 5조 5000억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절반만 쓴다고 하면 2조 8000억 되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온누리상품권의 확대, 그러니까 사용처 확대를 저희가 굉장히 하고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도 300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적극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저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감면해 달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정부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을 안 받아 주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현실감 있는 안을 좀 내 줬으면 한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사실 10년 장기분할상환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대책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의 5년 상환연장 부분들은 사실 폭넓게 지원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자체는 변동 폭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여야가 합의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 해 주시면 에너지 비용 부분들은 할 수 있고 다만 이걸 법적으로 강행으로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부가 잘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잘한 일이지요. 학생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략 93억이나 들여서 농림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해서 좋은데 농림부 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은 ‘천원의 밥상’을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 청년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청년이에요. 대학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중소기업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에 스톱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스톱한 거예요? 산자부에서 한 겁니까?

한번 보시지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저렇게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488억, 943……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저렇게 즉 지원해 왔다가 작년 안 했고요 올해 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음 것 보시면 나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 사업자들의 퇴사 현황을 보니까 지원기업은 15만 명 중에서 월평균 퇴사가 1만 2000명, 즉 월 퇴사율이 지원기업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미지원기업은 늘어나고 있지요, 1.91%로? 그러니까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밥상’ 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요새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 또 중소기업 잘 안 다니려고 하니까 월 5만 원씩이니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내년 예산에 좀 잡아 달라.

경제부총리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런 돈 정도는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패스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수혜 대상, 그걸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고요.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소득행위가 없는 대학생과 일정 소득이 있는 산단 청년, 물론 같은 청년이지만……

○**허종식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딱한 것만 하니까 제가 재밌는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걸 왜 보여 드리냐 그러면, 백령도 콩돌해안입니다. 이 해안에 있는 돌이 콩알만 하다고 해서 콩돌해안이고요. 그 옆에 있는 섬은 굴업도라고 하는, 서해의 낙조입니다. 대청도의 서해 풍경이고요. 소청도의 분바위라고 하는, 즉 옛날에—저것 하얗잖아요—등대가 없을 때는 저게 달빛에 등대 역할을 해서 우리 어부들이 저걸 보고 찾아왔다는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이고요. 서해에는 저런 아름다운 섬들이 무려 164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인데 저것만 보여 주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한번 넘겨 보시지요.

서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백령도 현장이고요. 이것을 집하장에 모아 놓은 곳입니다. 백령도입니다. 서해5도에 얼마나 쓰레기가 심각한지 해양쓰레기 한번

보시지요. 외국산이 많이 보이시지요? 백령도는 해양쓰레기의 60%가 중국 등 외국에서 온 쓰레기입니다. 덕적도 앞바다는 장마철에 한강 하구를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서해5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것 한번 보시지요. 연평도 집하장이고요.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천에 있는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해 북단 섬, 중국발 해양 쓰레기 심각’. 저렇게 쓰레기 천지입니다, 서해가. 언론에 나온 겁니다. ‘장마철마다 섬 덮치는 육상쓰레기’, ‘백령도 집하장 포화…… 해양쓰레기 반출 대책 시급’.

이런 정도로 서해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저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톤당, 육지는 3만 7000원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는 인천까지 무려 222km나 뛴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톤당 54만 5000원이 듭니다. 연평도는 인천까지 124km, 30만 원 들고요. 덕적도는 인천까지 오는 데 대략 24만 원 정도 듭니다. 서해 웅진군은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년—조그마한 섬입니다—55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적도 앞바다까지의 쓰레기는 한강을 타고 내려오니깐 경기도하고 서울시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서해의 섬은 중국, 미국, 전 세계에서 다 날아오는데 저 웅진군이나 이런 정도의 능력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섬은 다 노령화가 돼서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저걸 좀 치우게끔 정부가 도와달라 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여기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25억 원을 좀 지원해 주자고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노’ 했습니다. 저렇게 됐는데 좀 도와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저희 안에 보면 저희들도 예산심의 과정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24년보다 25년이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증액해서는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224km에 이르는 데 톤당 54만 5000원 든다니깐요. 굴업도, 핵폐기장으로 논란된 굴업도는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트랙터 하나가 없어서요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인천시가 사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모아는 농는데 인천까지 가져올 돈이 없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정화운반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척 신규 건조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허종식 위원 좀 지원해 주시고, 서해의 아름다운 섬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찾아가 주십시오.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율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율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또 정부에서 최근에 마무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참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정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여실히 좀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수 위원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원자재값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또 국제금리도 오른 상태, 반면에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골목상권을 비롯해서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자칫 재정을 잘못 투입하여 물가 상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한마디로 참 이렇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평균 9% 이상 정부 예산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부 예산안 총액을 보더라도 앞 자릿수가 거의 한 해 걸려서 바뀝니다. 400조대에서 시작했던 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6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올해 3.2% 세출이 증가했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수 위원 작년에는 심지어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2.8%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물가상승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게 세출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보면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수 위원 사실상 여러 군데에서 그런 선심성 예산, 퍼주기 예산, 심지어는 우리 여당 위원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돈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총선에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낸 걸 가지고도 또 책임론까지 아마 정부에 돌리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 그러니까 재정을 좀 풀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건축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저희 기초를 건축재정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나 보면 정부의 역할이 하나는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과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다시 정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에는 저희가 재정 자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지 않고 저희 재정지출을 했고요. 그 외에 정부가 하지 않고, 경제활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장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은 거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성과가 확실치 않은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건어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 특히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게 지속가능성은 떨어졌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거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수출에서 투자, 소비 쪽으로 그러니까 내수나 소비가 가장 마지막에 좀 온기가 확산되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나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온기를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부분들에 온기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 기자브리핑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예산도 1년에 거의 몇십억씩 늘리면서 국가채무도 지금 5년 동안 400조를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라는 정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돈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우려보다는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뭔가 경제도 좀 좋아지리라 이런 기대 심리는 있는 반면에 정부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돈을 마구 풀어 댔기 때문에 총통화량이 굉장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돈을 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쉽게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수 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도 보도 못한 그런 경제정책을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이야말로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한 분 중의 한 분이신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의 설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 가지고 우리 경제적 약자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더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특히 최저임금 같은 걸 급속하게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위의 계층들의 임금도 굉장히 올라서 요즘 보면 외식비가 많이 올랐는데 결국 그 원인은 하나는 시급치 같은 이런 농산물, 기후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 오르고 하나는 임금입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 총리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떤 경제학자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꼴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16.4%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무려 한 16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10.9% 또 인상되니까 무려 27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추정치도 내놓았고요. 고용률 줄어들었습니다. 공장가동률도 IMF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실질적으로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성하고 정말 새롭게 혁신성장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통계 마사지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감추기 위해서 소득분배율, 가계소득 이런 것들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높게, 또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된 것처럼……

심지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통계 이런 것들을 국민을 속이는 허위 통계를 내워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일단 사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정말 통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경제정책의 추진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켜 버리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국무총리 한덕수 그래서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러 가지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의 실패 또 그 폐해에 대해서 이미 결과로써 입증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퍼주기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정책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25만 원, 13조……

지역사랑상품권 매해 예산심의할 때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정부안보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증액시키려고 할 텐데 행안부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실질적으로 쓴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돈을 쓰는 거니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은 이 제도를 쓰지 않고 특정 지역만 썼을 때는 그 지역에만 그걸 가지고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받은 만큼은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전 지자체가 똑같이 하면 다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익 보는 건 없고 국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예산 만큼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뿌려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별히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 올리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썄,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성남시장 때부터 쪽 이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여러 가지 기본소득들이 많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이런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원해 준 예산들의 총액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느냐,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성남시부터 시행되었던 이재명 대표의 대표 기본소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요. 자기개발을 지원한다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동안 100만 원 줘 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뭐, 모텔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낭비성 그런 쪽으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골프연습장 또 성인용품, 심지어는 20%, 30% 할인된 카드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경기도에 확산을 시켰고 전국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보면 폐해가 드러난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뿐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3조 원을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경기도라 하더라도 그냥 본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법정적립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동안 적립해 왔던 것을 무려 60%, 80%까지 탈탈 털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선심성 예산에 퍼부은 겁니다.

행안부장관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정말 유사시 재난·재해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금들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저때 사실은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아주 최상위층, 그런 부유층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데 뭐 죄 있냐, 부자들까지 다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0%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그런 시각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퍼주기 선심성 예산의 폐해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먹사니즘이 됩니까? 거기의 주된 내용은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또다시 퍼주고 무상 복지, 무상 시리즈 하자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것은 먹사니즘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막사니즘입니다. 정말 요즘은 세대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과국이 예정된 복지는 세대 간 착취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미래세대에 빚을 강제로 떠넘길 권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책임져 가지고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동등한 국가로부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물 다 빨아먹고 우리 미래세대에는 정말 빚만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2060년도에는 한 해에 적자만 1000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감당이 됩니까? 그러면 연금 다 못 받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그런 원망을 우리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그런 지출을 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특별히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렇게 방만한 예산 사용, 투입은 정부 부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은 어땠습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이게 보면 해야 될 비정규직, 하지 말아야 될 비정규직,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분별하게 정규직화시켰습니다. 무려 13만 명의 임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임직원이 늘어났으니까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 늘어나고, 그래도 그런 고정비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조 6000억 급감했고 부채가 82조 6000억이나 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알짜 공기업, 가장 흑자 기업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2016년 당기순이익이 7조가 넘는 기업이 2021년 손실이 5조가 넘는 기업으로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그냥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탈원전 한다고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 제대로 반영 안 시키고 계속 부담만 한전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니까 신규 채용은, 주요 공기업 신규 채용이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제대로 향상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과기출연원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5년 동안 3000명이 넘습니다마는 오히려 성과지표로 표시할 수 있는 특허나 논문, 기술이전 이런 성과지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원 24곳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2개 이상 하락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3개 지표 이상 하락한 출연원도 5곳이나 됐습니다.

돈은 더 쓰고 성과는 하락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데 대해서 한번 외부에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코레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무려 4500명이 전환됐습니다. 원래 직원이 800명이었는데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5300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레일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수시로 사고 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그런 정규직 전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서의 방만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철저한 조직 진단 또 경영 혁신을 위한 그런 과감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 아직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구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국회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정당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의사 진행발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하셨습니다. 출석하지 못하면 출석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출석해서 답변하면 답변을 길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국무위원들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그냥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우리 정치권의 수많은 개혁 과제와 국회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고 또 기관장들이 참여하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특정 몇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이러한 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위원님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국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결위원 처음에 인사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시간을, 국정원의 시간을 아끼는 것도 소중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에서 아주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밀정이 있네 없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네 아니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그런 케케묵은 친일 논란으로 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남북한 단일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저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지워졌습니다. 독도가 지워진 건 분명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친일 정권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우리 선수들이 친일 행위를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친일 정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이전의 박근혜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정부였고 그 길을 위한 길을 달려 온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한반도기에 대한 것을 두고 문체위에서 설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와중에서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문체부장관이었던 황희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전에 배현진 위원께서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하고, 회피 전략으로 뺀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때 평창올림픽 때 우리 성화봉송 지도에 보면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기……’, 없었다는 거지요.

또 다음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반도기는 처음부터,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독도 표시가 없었는데 중간에 어느 대회에서……’, 살아났다는 거지요. 한반도기는 독도가 지워지기도 하고 독도가 살아나기도 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당시의 논란을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친일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질문에서 황희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장하고 다 알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무위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친일 정부 아닙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지워져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친일 정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후진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케케묵은 밀정 운운하지 않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 국민이 알고 계시고 전 국민이 분노하시는 사항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리고 여러 기관장들께서도 너무나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그 언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내용을 보면 더 끔찍하고 헤드라인만 봐도 끔찍합니다. 사촌방, 지인방, 여군방, 심지어 여군을 성희롱하면서 군수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성인물 합성 쫓아 보니 범인은 내 곁에…… 딥페이크 피해 3년 새 15배’, ‘000능욕방 딥페이크, 접지인 노렸다…… 지역별·대학별·미성년까지’, 강경대응 예고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가

해자들은 쫓지 말고 보도한 기자도 능욕해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PPT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공개된 텔레그램 채널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39만여 명, 22만여 명이 참가하는 방들입니다. 지금 인터넷 맘카페에서나 여성들의 카페에서는—전국에 다니는 택시 숫자가 26만 대 정도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우리가 택시를 보는 것만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너무나 무섭다, 끔찍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차마 여기에 대해 입에 담을 수준이 아닙니다.

2017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부 종합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조주빈 박사방, n번방 사건은 2019년에 밝혀져서 2021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구속됐는데도 성 착취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n번방 사건으로 인한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청소년들이었습니다.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7년에 이렇게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딥페이크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월 30일 날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으니깐요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번에는 국민들이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경찰청장님 혹시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서지영 위원** 어디 계시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여기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청장님, 지금 저렇게 보셨다시피 텔레그램방이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시거나 수사하시는 건은 몇 건이고 텔레그램방의 참여자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현재 지난 한 주간 접수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것만 120건이 넘습니다.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입니다.

○**서지영 위원**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종합대책에 저희 경찰청도 참여하고 아울러 지난 8월 28일부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 처음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

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검거 인원이 대부분, 약 75% 내외가 10대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 내외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범죄의식 없이 범죄하는 경향이 많아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서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대학별 겹치인 채널의 참여 인원이 1300여 명입니다. 중고등학교 겹치인 채널이라고 불리는 것에 2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초중고에서 또 대학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번에 긴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186명, 교원 10명 이렇게 해서 196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요.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딥페이크 채널이나 방이 학교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들도 있고 신고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몇 개가 지금 이런 게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학교도 지금 193개교로 체크가 됐고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무려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게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K-뷰티, ‘케이’ 자가 붙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워딩들이 전 세계에 넘쳐 나고 있는데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K-딥페이크, 성범죄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총리님, 이런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끄럽게, 부끄러운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법무부장관님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지영 위원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여러 가지 n번방 사태라든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n번방의 최초 사건은 ‘추적단 불꽃’이, 대학생 두 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1년 넘는 잠입취재 끝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에 대해서는 호주 사법 당국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호주 사법 당국에서 먼저 신상 공개를 했

었지요.

그다음에 서울대 n번방 사건 어떨습니까?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도 모두 서울대생이었고.

피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일원인 원은지 씨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방으로 들어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 모으고 해서 나중에 경찰과 함께 검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는 수고로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의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자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당시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는 경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확보한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에 갔을 때 일선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텔레그램 못 잡는데. 어떻게든 해 볼게요’. 돌아서는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멀리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기관장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왔을 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텔레그램은 못 잡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찾아와서 수사를 의뢰하면 이제는 경찰은 어떻게 대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 다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서지영 위원 따뜻한 위로도 함께 일선 경찰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잡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가지고 온 증거물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에도 종합대책이 있었는데 2019년, 20년, 21년, 24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범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에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고검에 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저는 어려워서는 잘 모르는데 재정신청은 99%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용되었고 결국 재판을 진행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여기 경찰청장님, 법무부장관님,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많지만 고통받는 피해자들, 범죄자가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뱃페이스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YTN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부처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 7500만 원, 올해보다 2억 9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32억 6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3%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정부적인 대책을 하고 피해자 구제와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마약수사와 같이, 마약범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뱃페이스 성범죄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이 남은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화성시율의 이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뱃페이스 텔레그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우선 정부를 통할하고 계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전체 큰 패러다임 중의 하나입니다.

○**이준석 위원** 자유를 창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매우 공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꼭 검거되고 꼭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하고 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에 따라서 자유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거 2020년에도 보면 소위 n번방 사태라고 하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똑같은 매개입니다—텔레그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보면 정부에서 대책 세운다 해 가지고, 방심 위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방심위가 텔레그램 쪽에 접촉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하고 경찰은 엄벌하겠다고 뛰어다니고 법무부에서는 일벌백계하겠다 그리고 이 엄청난 메시지들만 난무했지 실제로 검거된 방식은 방금 전에도 서지영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민간에서 추적단을 꾸려 가지고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이 자력구제에 나서는 상황들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총리님, 이번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 하셨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한덕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경찰청장님, 텔레그램 법인을 최근에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가지고 내사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수사를 하다가 어떤 디지털 증거나 이런 걸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인이나 기술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내사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범죄를 명백하게 도운 정황이 있을 때 방조 혐의로 입건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동작하는 것인데 범죄를 조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방조했다는?

○경찰청장 조지호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렇게 적용하면 매우 광범위하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중요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그런데 애플은 현재 국내에 대관도 두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스물여섯 자리쯤 되고 그래서 못 풀었다 그러면 애플은 방조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정도 가지고는 방조가 되지 않고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예비 기소를 한 내용도 텔레그램 측에서 성착취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법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위원 원래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자체적인 삭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범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위원 혹시 청장님께서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라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준석 위원 그러면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카카오톡에도 보면 일반대화방이 있고 자물쇠가 달린 비밀대화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런 비밀대화방, 종단간 암호화 대화방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국가를 비롯한 어떤 주체도 내용물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텔레그램 운영사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에서 중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 안에서 보안을 전제로 그런 특수한 방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준석 위원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해당 업체가 인지하지 못해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가지고……

○경찰청장 조지호 인지하지 못하면 방조 혐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동작할지, 국제적인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귀추가 주목되기는 합니다.

관세청장님 계시지요?

○관세청장 고광호 예,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관세청에서 2023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만 325건 정도의 마약밀수 시도가 잡혔다고 하는데 보통 마약밀수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관세청장 고광호 여러 가지 매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이나 이런……

○이준석 위원 그러면 여행자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온 게 81건 정도 되고요 국제우편으로 날아온 게 149건 정도 되고요 특송화물로 날아온 게 92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장 고광호 예.

○이준석 위원 그리고 이 통계는 매년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관세청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국제우편은 마약범죄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매개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청장님이 답변하신 기준대로라면 어떤 조치를 우정사업본부에 해야 될까요?

○관세청장 고광호 글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분명히 지금 이 우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마약은 매번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관세청이 계속 적발하고 있고 적발하지 못한 분량도 있을 겁니다.

○관세청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이 매개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처벌할 수 있다, 방조했다라는 식으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다를 수 있겠냐 그냥 그런 취지의 논리적 말다툼 같은 것이었고요.

교육부장관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답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학교와 관련된 제보가 많아 가지고 교육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준석 위원 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들었다는 신고 사이트의 존재를 파악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 보고 놀라 가지고…… 제 지역구의 3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그 명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그 해당 학교에 실제로 학교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 있는지, 학교 측은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세 곳 전부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17개 교육청에 다 연락을 해서 긴급조사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9건이 실제로 신고가 돼서 그중에서…… 196건이 신고가 돼서 179건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괴리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학생들에게 매우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확보한 화면 중의 하나를 보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 2학년 4반인지 모르겠지만 답페이지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를 설문조사로 이렇게 칠판에 붙여 놓고 학생들에게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조사가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혹시나 원님재판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것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교육청이 이런 조사를 했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교육청들은 어느 교육청도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교육청에도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교육에 더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 지목하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교육계 내에 생겨서도 안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준석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매개가 어떻게 되고 기작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면 그건 전혀 범죄가 아니지만 비둘기 다리에 묶어 가지고 성착취물을 날려 보내면 그것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개물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텔레그램을 차단한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테러에 대한 정보 유통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매개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매개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방조나 등등으로 처벌하려면 더 많은 요건이 부가돼서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구비돼야 가능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을 했을 때 그 인식, 이런 상황이니깐 이것을 막아 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물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범의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은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된 매체입니다.

혹시 법무부장관께서도 대통령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텔레그램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고받고 합니다.

○이준석 위원 특별히 범의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라고 생각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범죄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총리님,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지영 위원님이 2개의 텔레그램 채팅봇 방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는 40만 명 정도, 하나는 22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을 보여 주셨는데 사실은 그 방이 해외 개발자가 만든 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국인 사용자와 비한국인 사용자가 같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 국내에 이런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가담자가 22만 명 또는 62만 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가짜뉴스나 아니면 이런 책임감 없는 유포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 불안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응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글쎄요. 일단 하여튼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다양한 단속 수사, 피해자 지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관리 강화, 예방교육 또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총리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부분의 대처 방안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n번방 사태 때 말씀하셨는데 결국 문턱이 막혔던 공간이 바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또는 텔레그램과의 소통 관계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질문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 2020년 사태 때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결국에는 텔레그램 못 잡으니까 무라도 썰어야겠지 그래 가지고 카카오톡에 지금 검열 서버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방위인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국내 메신저 기업과 해외 메신저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가 거론한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 여론에 너무 밀려 가지고 뭐라도 하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화되게 된다면 저는 국내 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수사기관에서 해외 메신저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애플 같은 기관에 테러나 이런 위협이 아닌 경우에 수사 협조를 실제로 받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러?

○**법무부장관 박성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법무부가 더 간곡한 편지를 쓴다 이런 것 말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지금 당장 방법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님, 다시……

아까 사실 이런 내사하고 법인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수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장관님 말씀으로는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쪽에서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실제로 외국 법인 중에서 유튜브의 베이스가 되는 구글이라든지 X의 베이스가 되는 트위터 이런 데는 다 협조가 잘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 거기는 한국에 대관도 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경우에만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결로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계속해서 브라질 측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범죄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텔레그램 측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분명히 제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명백히 우리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법률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청장님, 아까 탐지 소프트웨어를 경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텔레그램 서버 측에다 그걸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경찰에서 ‘여기에 파일 업로드해 보십시오’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기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행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성착취물 제작을 막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 보이거든요.

○**경찰청장 조지호** 일단은 저희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 경찰을 방문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약 1~2분 내로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청장님, 그런데 딥페이크는 사실 저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AI 영상도 만들어 보고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딥페이크임은 판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누가 내왕해 가지고 실제 파일을 넣어 보고 할 정도의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쪽에서 만약에 대안으로 나온다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겠지만 지금 당장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약간 켜가 다른 답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약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총리님, 긴 시간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나왔던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선 위협이 좀 과장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시작은 물론 언론에서 초기에 환기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62만 명이다, 가담자가 62만 명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과 정부기관별로 아이디어 던지고 쉐 말 하기 경쟁처럼 돼 가는 순간 또다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미 구분해 가지고 정부의 대처 중에서도 이미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과기부도 있고 방통위도 하겠지만 실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들과 아주 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사실 현실적인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제 앞에 질의하신 서지영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면서 저는 약간 공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좀 더 면밀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시갑의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반도체, AI, 가전, 조선, 태양광, 풍력, 배터리, 자동차산업 등 많은 부분을 중국에 시장을 내어 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치는 이념 전쟁, 국론 분열, 역사 능멸, 국민 갈라치기,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놀이에 무법천지가 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언론 탄압이 불공정하게 일상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라이트와 극우 유튜버, 반국가 세력과 정치검찰인 매국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 서민경제 폭락, 고물가, 대출이자 부담 등 민생 파탄에 오늘도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언급했지만 국민들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본인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국민의 분노 어린 질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동안정화장치는 평균수명이 증가하거나 연기금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에 따라서 급여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그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노후소득 보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연기금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에 평균수명이 가장 많이 늘고 연기금 감소 상황에 직면하게 될 세대가 기성세대입니까, 아니면 청년세대입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무래도 장기간 연금을 기다렸다가 받는 분들에게 이런 변동의 가능성이 많겠지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세대에 더 연기금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정부가 그 연금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의 많은 나라가 연금개혁을 하면서 이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관련되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착시효과인데요. 결국은 세계에서 자동안정화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연금급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연동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보험료율이 높고 또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정하게 해 주고 있고 연금 수준도 높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일정하게 해결된 나라에서는 이것이 일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보험료율도 낮고 국고 지원도 없고 급여 수준도 매우 낮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고 이런 나라에 이것이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동시에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국회 같은 데서 연금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종합적으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정부는 그러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21대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안에 대해서 건어차고 지금 다시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있는 건데 언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조속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건어쫘다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수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연금 전체를 운용시키는

것의 중요한 파트긴 하지만 또 거기에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당히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기초연금을 포함해서—그 모수개혁 하나를 가지고 당시에 그게 채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됐다 해서 전체 연금개혁을 건어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종합적인 안을 정부가 내면 연금특위를 만드셔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연금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건어찼다 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공론화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들이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낸 안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이 모든 것을 놓고 저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쪽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고……

○국무총리 한덕수 정부의 안을 내니까요 일단 그것을 가지고……

○서영석 위원 충분하게 숙의가 되는 그런 안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른 하나로 자동안정화장치 말고 세대 간 보험료율에 대한 차등 인상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청년들이 기여금을 덜 내게 되면 나중에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이것은 오히려 청년들은 연금을 오랫동안 부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받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짧게 연금을 넣고 그 연금의 혜택을 보는 기성세대와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영석 위원 정부의 그런 인식이 결국은 세대 갈라치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정부로서는 가장 합의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갈라친다 하는 표현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국무총리 한덕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잘……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이 과연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더니 결국은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해서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겠다 이런 것으로 개혁안을, 그것이 마치 개혁안인 것처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을 수 없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모수개혁과 동시에 구조적인 이러한 개혁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성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겁

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부안을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생각은 갖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대로 그냥 소득대체율을 묶어 두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희가 곧 제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충분하게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GDP 국고 지출률이 한국이 9.4%로서 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낮는데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하면서 국고 지원이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전부 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에서도 연금제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대개 3단계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그러나 이것들 간에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머지, 공적연금을 뺀 나머지 2개의 연금도 충분히 세제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이게 연금개혁이 보험료율은 올리고 연금은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게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연찬회에 가서서 ‘이 싸움은 곧 끝날 것이다’—의정 갈등에 대해서—‘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제가 언론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린 취지랑 전혀 왜곡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이겨 낸다’, 이게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마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했던 거랑 데자뷰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의료계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특히 강조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교육부총리님이 그렇게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시중에는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6개월 안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왜곡된 거고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9월이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 학생들과 전공의가 돌아오는 노력을 정말 최대한 해서……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은 이긴다는 것에 초점보다는 결국은 의료 붕괴가 오고 있고 이것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럼 부총리께서는 왜 6개월을 강조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6개월 강조한 적 없고요. 제가 오히려 9월이 지금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예산도 지금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국면을 전환할 수 있고 지금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는 부총리께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입생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은 의료교육농단으로 이어지고 의정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의 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유급생을 포함해서 7500명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돌아오시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만약에 못 돌아올 경우에는 또 개별 대학들과 최대한 협 의를 해서 그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3000명 전공의와 3000명 전문의가 안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부총리의 얘기로는 배정 과정보다, 증원 과정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에 소통과 불신의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조금씩 낮춰 가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내년도에 입학생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교육 여건이,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교육 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충분하게 예산이 담보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올 예산도 2.5배 이상 확보를 했고요. 또 교수를……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480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났는데 애초에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6조 60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중에서 지금 일단 당장 내년에 집행될 것들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 교수가 중요한데 교수도 1000명, 정말 힘든 숫자입니다. 그것도 다 행안부랑 기재부랑 합의를 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그 투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부총리가 의료교육농단의 주역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교육부총리께서 좀 더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5년 입학정원과 뽑을 학생 숫자가 결정이 됐고 그 학생들을 뽑을 입학절차가 개시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였고요.

2026년 정원의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아마 2026년에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에 의하면 1년 8개월 이전에 정원을 일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러나 여러 번 정부가 약속했듯이 의료계가 합의된 그런 안을, 과학적으로 계산된 합의된 안을 가져오시면 2026년의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

○**서영석 위원** 그 얘기는 합의된 안이 안 오면 2026년도에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요, 확고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2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이유는 1년 8개월 전에 정원을 공개해야 된다는 우리의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얼마 전, 지난 30일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과탄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인력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국무총리 한덕수**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의대 증원에 있어서는 추계를 먼저 하고 증원하지 않고 증원하고 추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그 문제는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특정한 일이 없어도 항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3년 내지 5년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하는 방침을 정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료특위에 의료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결과를 낼 수가 있다면 2026년도부터도 거기서 논의되는 합의안을 반영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의료현장을

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리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의료현장을 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료현장에 가 보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공의들이 현재 상태에서……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요. 전공의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보다야 영향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문의들과 돌아온 전공의들과 그리고 PA 간호사들과 또 그동안에 고용된 많은 의사들과 촉탁의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서영석 위원 총리님, 지금 돌아온 전공의가 8.8%고 인턴이 3.7%고 의대생 출석률이 2.7%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급실……

○서영석 위원 응급실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있고 온열질환 환자들이 다 죽어 가고 있고 그런데 응급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아니, 그런 케이스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과거의 우리 응급실의 실태를 한번 봤을 때는 그 상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고 응급실 뱅뱅이는 계속 일어나고 지방에서 서울로 전부 다 몰려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조선왕조 역사를 보면 선조의 안일함 때문에 왜구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한반도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그릇된 신념 때문에 죄 없는 백성은 목숨을 잃고 청나라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의료대란, 이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진윤한조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의료대란의 오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이 2000명의 증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대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덕수 또 누가, 누가 2000명을 했다……

○서영석 위원 장관이 2000명을 증원하는데, 보정심에서 증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 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관이나 그 해당 부서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법령에 따라서 한 치도 위반됨이 없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석 위원 대통령과 총리를 다 패싱하고 장관이 결정해서 이런 사회적 문란과 의료대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이 없다? 다 됐다?

○국무총리 한덕수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에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없고 이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배경에는 누군가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고는 이 사안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안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그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서른일곱 번 이상 의료계와 협의를 한 것이고 또 당연히 보정심에서 정할 때에는 적절하게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의료의 붕괴는 결국은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박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기재부장관에게 저도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역대 최대 세수결손 56.4조 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세수결손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래서 즉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는 부자 감세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실적 저조 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적 감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정부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장관, 2023년에 대외경제 악화를 기재부도 예측하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2년 4/4분기부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을 1.6%로 2022년 2.5% 대비 하향하여 전망하였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5%로 전년도 4.6% 대비 하향 전망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런데 왜 이런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그때가 2022년 9월입니다, 정부가

전제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2023년도 전망치는 실질성장률 2.5%, 민간소비 증가율 3.2%, 취업자 증감 15만 명,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등 낙관적이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이 결국 세수결손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부 예산안이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아래인 2.1%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IMF는 2.0%로 전망했는데 예산안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의 간사였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이 낙관적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무수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추경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세수결손의 책임을 예측할 수 없는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책임 회피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위원장 박정 2022년 9월 2.5% 예측하고 12월 1.6% 예측은 차이가 너무 큼니다.

이미 기재부는 2022년 12월부터 세수결손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세수 추계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여러 가지로 민첩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2022년과 23년의 상황은 사실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은,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실적과 자산 시장에 대한 충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위원장 박정 제가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기재부의 책임이 이런 정확한 예측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9월에 발표할 때와 12월에 발표할 때 3개월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 정도로 예측을 못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조세정책, 세제를 바꿈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세수 추계에 있어서 좀 더 잘했어야 된다, 대응을 좀 더 잘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당시는 부총리는 아니셨지요, 그 당시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장 박정 그때 공교롭게도 2023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을 만들 용기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수결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국세 수입 오차율,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는 21.7%, 2022년에는 15.3%, 2023년에는 -14.1%입니다. 최고와 최저를 놓으면 거의 35.5%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10조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의 본분은 이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이든 또 는 민생이 어려운 것들에 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5% 이상이 차이 나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가 국민들께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하여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세수추계모형 개선,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국제기구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세수 오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래서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방하고 국회와 같이 논의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정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국무위원들께서도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좀 피곤하신 것 같기 때문에 잠시 환기를 위해서라도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회의중지)

(2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후에 물가가 크게 올라서 국민들께 많은 피해가 갔던 것이 맞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그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무려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가 있었고 그 양적완화를 거둬들이기 전에 코로나가 와서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급망 분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또 재정 팽창도 있었고 말씀하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공급망의 문제도 있어서 물가가 대대적으로 올라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일단 금리를 올려서 화폐유통 속도를 낮춰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게 되면 경기침체는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른바 성장을 희생한다고 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경기침체에 재정지출을 늘려서 시장을 보완한다 이런 접근도 하지만 그것은 물가 상승이 없는 이른바 일반적이고 단순한 경제위기고 복합적인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금리를 높여서 경기침체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리면 오히려 다시 금리와 물가를 자극해서 고금리 고물가의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이런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는 경기침체의 경우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이고, 두 번째는 경착륙입니다. 연착륙은 이른바 부드러운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인데 내수 부진, 수출 부진, 고용 악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증상이고 경착륙이 진행되게 되면 기업과 가계의 연쇄 도산 또 금융, 은행 같은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지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공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합한 경기 진단과 처방의 조합에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일단 고금리가 왔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동시에 저성장이라는 후유증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착륙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경착륙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경기침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때 재정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중립재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립재정이라 하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 수준을 의미하고 그러나 이때 가장 힘든 계층은 또 추가로 미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저희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약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나 인식이 같다 해도 그 효과와 내용이 충분치 못하면 저희는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둬들여 새출발기금의 효과성이 충분한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동시에 약자 복지 이것이 잘되고 있지만 이 약자 복지의 재원을 저희가 언젠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림부장관입니다.

○**박수민 위원** 2023년 예산안에 보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번의 우리 국회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6조 원, 7조 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왜? 과거에 이미 저희는 그 돈을 썼지만 물가는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할 물가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높았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데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수민 위원**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또 유통에 개입하는 것인데, 맞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양곡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 주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만큼을 생산자에게 보장해 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높은 물가는 놀랍게도 의식주입니다. 그중의 대표가 식료품이지요. 정부 개입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면 본원적인 대책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율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올해 R&D 예산 수조 원을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르텔 운운하며 모욕을 하더니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과도 없이 예산을 역대 최대로 증액했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르텔이라고 할까, 이런 비판이 과기계에서도 굉장히 강했다’, 지난해 9월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말했던 그 카르텔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좀 더 상세한 것은 과기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깎아 놓고 내년도 R&D 예산을 29.7조 원으로, 올해 대비 3.2조 원 늘렸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2023년도 R&D 예산은 29.3조 원입니다. 삭감 이전보다 고작 1.4% 증액입니다. 그래 놓고 질적 전환 운운합니까?

총리님, 올해 물가상승률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2%대……

○**황정아 위원** 2.5%입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좀 더 내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2.1%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그 부분은 계산한 바는 없습니다만……

○**황정아 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R&D 예산은 28.4조 원으로 23년도 대비 1조 원 삭감입니다. 게다가 2026년, 27년, 28년, 향후 계속해서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R&D, 중기재정계획 전부 다 국가총지출의 5% 미만입니다. 총지출의 5% 이상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위원님, 세계 어느 나라든 GDP 대비 R&D 비율을 얘기할 때 실질로 얘기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실질 R&D를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대개 경상을 가지고……

○**황정아 위원**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되는 시대, 이게 누가 뺏은 말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경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작년의 개혁의 핵심은 좀 더 새롭고 진취적인……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에 R&D 과제 1만 개 연구비가 삭감되었고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과제들 원래 23년도 계획서상의 올해 예산이 5조 7700억이었는데 실제 올해 받은 예산은 4조 2000억으로 1조 56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97개고 기투입된 예산이 716억이 넘습니다. 매몰비용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총리님, 혹시 산업부의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어떤 전지라고 그러셨어요?

○**황정아 위원**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수소차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R&D 비효율 때문에 예산 깎았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R&D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제가 열거 드린 모든 사업이 23년도 성과평가 당시에 우수성과 등급 받았던 R&D 사업들인데 올해 일괄 95%, 93%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R&D

를 비효율이라고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것도 일괄 삭감을 하는 것도 비효율입니까? 정부가 공인한 우수 사업들이 나눠 먹기 카르텔이었습니까? 이러니 연구 현장에서 R&D 추경이라도 해 달라고 절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답에서 R&D 추경 요청했지만 그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6월 기준 전문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이미 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며 연포자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기계를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추경도 없이 내년의 예산만 짊짊 늘려 주면 연구 현장을 떠나간 연구자들이 다 돌아온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총리님, 추경 진행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진행할 생각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 답변들 하셔 놓고 어떻게 R&D를 입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까?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예산목표제 투입 필요성을 방금 스스로도 증명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제 말씀은요……

○황정아 위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무총리 한덕수 그 R&D의 GDP에 대한 비율을 그렇게 실질로 계산하는 나라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황정아 위원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흔들렸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 현장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지난 4년 동안에 R&D 비용을 10조를 늘리면서 프로젝트는 5만 개에서 7만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의 R&D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분절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R&D 활동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래서 현장이 이렇게 초토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정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정치철학자기도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고개를 끄덕임)

○강승규 위원 혹시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강승규 위원 본인이 뉴라이트 운동 참여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뉴라이트 운동이 매국 운동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뉴라이트 운동,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운동이 미국을 좌파의 늪에서 구조한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강승규 위원 우리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세 가지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적인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 원인과 또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더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딘가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했고 강력한 국가 안보를 추구하고 전통적 가치나 질서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도 뉴라이트 운동의 큰 이슈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경제 쪽의 전문가들도 그런 방향의 생각을 갖고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뉴라이트 운동을 아주 매국 운동, 친일과 이런 프레임으로 씌워서 왜 이렇게 혈안이 돼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글썽요. 그거는 뉴라이트 운동이 친일과는 거리가 먼데 그런 부분을.....

○강승규 위원 이거는 보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러기에는..... 그런 주장에는 상당한 왜곡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일부 주장 중에 상당수 인사들은 좌파 운동권 주의자들이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주의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자유의 기능 등을 축소하고 그렇게 하려는 반보수 이런 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생각이 이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어떤 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승규 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장관님, 1세대 노동운동가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강승규 위원 한 24년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 후에 한 24년 정도는 또 우파로 전향하셔서 자유주의 운동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강승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노총도 창건하는 데 참여하셨고 민중당에도 참여하셨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지금 뉴라이트, 그러니까 보수주의다라고 지칭한다면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지금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건 보수주의 이념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보수라는 건 또 그 이념 논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으로서 북한 같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해를 할 때 진보라든지 보수 이런 이념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구분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수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또 보수의 지지자들은 뉴라이트라든가 보수를 무슨 친일매국주의로 프레임 씌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글썄요, 저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 논쟁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강승규 위원 민주당이 그러면 뉴라이트를 무슨 친일 매국 이런 프레임으로, 무슨 어디 광복회에서 일곱 가지, 총리님 말씀처럼 무슨 기준을 정해 가지고 뉴라이트가 뭔지 지금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글썄요,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 일본, 유럽,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국가적인 목표고 젊은이들 모두의 목표입니다. 지금 어디 철 지난 그런 민족주의, 지금 항일 운동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5분이어 가지고 굉장히 짧아서 생각보다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총리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허종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 중에 내일부터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답변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가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오늘 제가 아침에 가락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가락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안반데기가 우리나라 배추의 제일 최대 산지인데 추석에 맞추어서……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출하가 돼서 본격화되고 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쯤 되면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추 가격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배추 무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7월 4일 날 농림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채소류, 과일류, 식품원료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히셨고요, 지원 규모는 16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6월 말에 원래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살펴보니 과일류는 스물여덟 가지고요 채소류는 양배추가 있고 식품원료가 한 여덟 가지 있고 배추, 당근 등이 9월에서 10월까지 아마 지속해서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하고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배추가 시중에 풀리는 시점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가격에서 경쟁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입 배추가 있고 우리 국산 배추가 있어도 이중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임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과연 물가 안정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할당관세 품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사료나 비료, 농약 등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것,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운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70종에 이르면서 국내의 생산 기반과 겹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억울한 겁니다. 기재부가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축수산물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발표에서 늘 농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정말 농축수산물이 고물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고물가의 주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
고요. 다만 23년도, 24년도 저희 최근의 물가 상승에는 비용, 공급 측 충격이었습니다. 공
급 측 충격이다 보니까 농축수산물이든 에너지 가격이든 이쪽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달리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런 할당관세를 유효한 수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서 했던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기재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정하고 물량을 정하는 과
정에서 굉장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과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농림부 측과 서로 협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맞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하
는 측면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먼저 요청을 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요청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어려운 부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가능하
면 우리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 줘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섬세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박정** 임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수 변경을 좀 해야 돼서 잠깐만 진행을……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
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 위원(48인)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향엽	김병주	김성원	김승수	김영진	김영환	김용태
김태선	문금주	박수민	박수현	박 정	박지혜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신영대
안도걸	엄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종오	윤준병	이용선	이재강	이준석	임미애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차규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현중

입법심의관 이형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차장 박태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안경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2차관 김윤상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2차관 강인선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차관 김선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차관 고기동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박성택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차장 박용수

법제처

처장 이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세청

청장 강민수

관세청

청장 고광효

조달청

청장 임기근

통계청

청장 이형일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 조지호

차장 이호영

소방청

청장 허석곤

차장 이영팔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산림청

청장 임상섭

특허청

차장 김시형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기상청

청장 장동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사무처장 조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상임위원 이옥남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승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2024. 8. 29.

○의안 회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이상 2건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통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이상 2건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